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비판적 검토
-페미니스트 지리학 관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이 민 경

2022년 08월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비판적 검토

- 페미니스트 지리학 관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손 명 철

이 민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8월

이민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상철



위

원

손명철



위

원

오상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08월



A Critical Study of
'Women Friendly City'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Feminist Geographic Perspective-

Min-kyeo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Myong-cheol Son, Ph.D.)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08.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비판적 검토 - 페미니스트 지리학 관점을 중심으로-

이 민 경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한국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내용이 ‘돌봄, 가족, 일·가정 양립’으로 수렴되어 여성성을 ‘모성’과 ‘약자’로 축약하고 있다. 둘째,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인해 정책의 내용이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 치중되어 있다. 셋째,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적 논의의 결핍이 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이 지닌 문제점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공간의 덫(spatial entrapment)’ 개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공간의 덫이란 여성이 마주하는 공간적 차별이 다시금 사회의 차별로 연계되어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으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 개념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역설적 공간은 공(public)/사(private)와 같은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아닌 기하학의 공간처럼 상호 중첩적이고 안과 밖이 교차하며 연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소 복잡한 역설적 공간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지닌 공간과 관련한 경험을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라는 장소성(placeness)을 유연하게 상상하는 ‘유연한 장소성(flexible placeness)’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의 여성들이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시민과 지역(공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며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공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 내 구성원들과 공간의 관계 맺기와 끊임없는 논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정책’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억압의 양상이 재현되는 차별적 공간을 해체하기 위한 과정의 정책의 선두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간 정책의 모델이 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정책이 지닌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 여성친화도시, 여성 정책, 공간의 덧, 역설적 공간, 유연한 장소성, 장소 소속감

【목 차】

국 문 초 록	i
표 목 차	v
그 립 목 차	vi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내용	6
II.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8
1. 여성과 공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흐름	8
2. 공간과 실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비판	17
1)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17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비판	20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3
III.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공간의 여성주의적 실천?	26
1.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	26
1) 여성들의 공간 되찾기(Take Back the Night)	26
2)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29
2.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33
1) 정책 시행 배경	33
2) 정책의 변화와 특성	37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44
1) 단일 범주화된 여성	44
2)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	47
3) 모호한 정체성	50
IV.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전략	52
1. 공간의 덧: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해석	52
1) ‘공간의 덧’에 걸린 여성들	52
2)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함정	55
2. 역설적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제안	57
1) 공간에 대한 경험 재구성하기	57
2) 공간적 개념으로 ‘교차성’ 드러내기	60
3. 유연한 장소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적 전략	62
1)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 과정의 정책	62
2) 여성과 장소, 장소와 장소 간의 관계 맺기	64
V. 요약 및 결론	67
VI. 참고 문헌	71
 부 록	 83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지리학 연구의 젠더화된 이분법 구조	11
표 2.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흐름	16
표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선행연구 분류표	25
표 4. 도시 여성들을 위한 유럽현장 주요 내용	30
표 5.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논의 흐름	32
표 6.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 추진 영역별 목표 및 대표 사업	34
표 7.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의 대표 사업	40
표 8. 여성가족부 선정 우수 사례(2012년~2021년)	41

【그림 목 차】

그림 1.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구성	19
그림 2. 1979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TBTN 운동	27
그림 3. 여성친화도시 지정 수 변화 추이	36
그림 4. 2010년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38
그림 5. 2016년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38
그림 6.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마을 관계	45
그림 7.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 지역의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48
그림 8. 여성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1
그림 9.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과 주요 생활권역	53
그림 10. 취업 남성(좌)과 여성(우)의 이동 패턴과 주요 생활권역	53
그림 11. (좌)제2회 제주 밤길 밝기 행사 (우)제2회 제주 퀴어문화축제	59
그림 12. (좌)본질주의적 관점의 장소 (우)구성주의적 관점의 장소	63
그림 13. 장소 소속감으로 연결되는 공간 정책	66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고인이 숨진 휴게시설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문이나 에어컨도 없이 계단 아래에 마련된 간이 공간이었다. (...)
환기조차 잘 안 돼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 지하 공간...”¹⁾

지난 2019년 8월에 발생한 한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공간에 대한 권리는 곧 인간의 권리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 예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해당 청소노동자의 젠더(gender)이다. 고용노동부(2021)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성별 비율의 70% 이상은 여성이며, 청소노동의 직군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업무 분별과 공간적 분리는 뚜렷하다. 가령 남성 청소노동자는 주로 ‘바깥’에 해당하는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분리하는 반면 여성 청소노동자는 주로 건물 ‘안’에 위치한 화장실, 강의실, 사무실 및 지하철 승강장 내부 등을 담당한다(인권오름, 2010; 안숙영, 2012). 이와 같은 청소 노동의 작업 공간 분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리하여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상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적 이분법(spatial dichotomy)은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인가? 열악한 휴게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한 여성 청소 노동자의 사례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려내는 성별 이분법은 단순한 사상 체계를 뛰어넘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특정 질서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정현주, 2013). 공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가정과 집으로 대표되는 사적 공간(private space)과 일터로 대표되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은 각각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으로 연결되어 이분법의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뒷받침하고 강화한

1) 연합뉴스, 2019,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학교가 책임”. 8월 14일자.

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은 가부장제의 공간적 이분법과 맞물려 주거 공간과 임금노동 공간의 분리를 가져왔다. 이러한 주거지와 일터의 분리는 근대적 도시 형성의 원리로 작동하였다(이현재, 2012a; 2016; 정현주, 2013; 2016; 2020). 도시 공간의 구조와 건축, 그리고 교통망을 포함하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은 생산과 재생산의 전통적인 성 역할(gender role) 이분법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즉, 도시 공간은 남성의 일상 경험을 공간의 구조와 설계의 표준으로 삼은 젠더화된 공간(gendered space)이다(England, 1991; 신혜경, 1996; 김현미, 2008; Kern, 2019; 정현주, 2020).

젠더화된 공간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이, 누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지(England, 1991)’를 규정하는 메타포(metaphor)이자 물리적 환경이다(정현주, 2012). 어떤 특정한 성별과 신체 유형만이 특정 공간의 ‘자연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며 그 외의 존재는 비가시화된다는(김미덕 역, 2017). 앞서 언급한 청소 노동을 포함한 돌봄 노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주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여성의 일’이므로, 남성이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던 도시를 설계할 때에 고려되지 않았다(Weisman, 1994; 정현주, 2016).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공적 공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여성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뉴스의 소재가 된다.²⁾ 즉 사회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의와 활동이 펼쳐지는 공적 공간은 여전히 ‘남성의 공간’인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기반을 둔 공간적 차별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따라서 공간의 차별적 기제를 인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비가시화된 사회구성원들을 가시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때 정책은 여성들의 다양한 일상적 경험과 목소리를 생활공간 곳곳에 녹여낼 수 있는 유용한 가시화 도구로 작동한다.

한국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정책은 이와 같은 논리적 맥락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여성-공간 정책이다. 여성의 공간을 사적 공간에만 한정하는 성차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을 도시 공간 계획과 발전의 적극적인 참여자 및 생산자로 상정하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출발하였다(유희정 외,

2) 중앙일보, 2021, “‘이러니 아이 안 낳는다’ 생후 59일 안고 국회 출석한 용혜인”, 7월 5일자.
한국일보, 2018, “신보라 ‘국회의원 사상 첫 출산휴가 도전해요’”, 9월 11일자.

2010).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2000년대 중후반 경기도 김포신도시와 대구광역시 팔공이노밸리³⁾ 등과 같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⁴⁾ 전략에 뿌리를 둔다(김양희 외, 2008). 도시 건설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공간의 성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탄생한 것이다. 효율성과 규모에 중점을 두어 ‘남성 중심의 생산 기능’을 강조하는 기존의 도시 담론에서 벗어나 공동체 문화와 감수성을 중시하는 생활 기능적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이상문 외, 2006). 더하여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시행 패러다임에서 다원적 분권지배로의 변화를 뜻하는 협치(協治), 즉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늘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이상문 외, 2006; 김양희 외, 2008).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의 형성은 1970년대 중반 캐나다와 미국을 아우르는 북미 지역 여성들의 안전한 도시 공간에 대한 요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밤길 되찾기’ 운동으로 알려진 북미 여성들의 Take Back the Night(이하 TBTN) 운동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반대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여성운동이다(Whitson, 2017; Kern, 2019). TBTN 운동의 외침은 여성과 도시 공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및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과 같은 북미·유럽 도시의 자치 기구가 여성과 공간을 앞세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International Office, 2004; 유희정 외, 2010). 성평등한 도시 공간으로의 변화로 말미암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은 곧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3) 팔공이노밸리(八公-Inno-Valley)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대에 건설된 혁신도시의 명칭으로, 프랑스의 소피아 앙디 폴리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경북도민일보, 2006).

4)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관심과 요구, 그리고 경험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정책적 전략을 의미한다(김양희 외, 2008). 1995년 9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된 패러다임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정책의 초기 기획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젠더 분석(gender analysis)과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를 주요 실천 도구로 활용한다(김양희 외, 2008). 이때,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칭한다(이상문 외, 2006;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유엔(UN)과 유럽연합(EU)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서도 변화의 흐름에 합류한 것이다. 여러 국제기구는 여성의 일상 경험이 반영된 도시 공간에 집중하며 여성이 공간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사용자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김양희 외, 2008; 유희정 외, 2010).

종합하자면 여성친화도시는 북미 지역 여성들의 TBTN 운동을 비롯한 공간권 되찾기 운동과 국제 사회가 주목한 도시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논의 위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개의 지역⁵⁾에서 2022년 1월 기준 95개⁶⁾의 지역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젠더화된 공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장임숙 외, 2012; 조주은 외, 2016; 김혜정, 2017; 이해응 외, 2020). 인류의 탄생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조적 차원의 성차별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성 주류화 정책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위계적인 관료제 시스템 하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정현주, 2020). 이에 더하여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의 낯섦과 용어의 모호함은 여성들의 삶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는 정책 실천의 바탕이 되는 이론의 체계적인 정립과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인 지리학에 젠더의 렌즈를 더한 페미니스트 지리학(Kern, 2019)의 시선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여성친화도시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인 ‘여성’과 ‘공간’에 주목한다. 여성과 공간의

5)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라남도 여수시. 익산시는 2008년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3월 여성부에 의해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당시 시장(市長)의 관심과 추진력에 기대어,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인 2009년 12월에 평등하고 안전한 행복 도시를 목표로 하는 제2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유희정 외, 2010).

6) 【부 록】 참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키워드가 현실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접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분법적 젠더 관계가 공간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젠더는 공간 구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를 규명하는 것이다(김현미, 2008).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공간 구조에 새겨진 젠더 이분법을 규탄하고 해체하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에서 파생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공간과 젠더의 관계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문제의식은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탄생과 정책 실행의 과정을 관통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 한국 지리학계 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탓도 있지만 여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지리학계의 놀라울 정도의 침묵과 무관심(정현주, 2016; 2020; 정희성 외, 2020)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보다 적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계보와 주요 개념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접목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정책 시행의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주요 정책 내용에 내재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다양한 개념적 도구에 비추어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재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여성친화도시 개념이 지닌 문제의식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견지하며 여성친화도시 정책 실현의 바탕을 이루는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개념과 정책의 이론화를 위한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의 큰 틀로 설정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주요 역사적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및 정책과의 접점을 구상한다. 이후 공간적 개념을 정책 실천으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인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비판을 검토한다.

3장은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 과정과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책 연구보고서를 선별하여 정책 시행의 배경과 내용의 변화를 추적한다. 2000년대 중후반 신도시 건설 단계에서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시행된 여러 연구와, 여성친화도시의 전신 모델인 서울특별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설계와 기준으로 활용되었다(조영미 외, 2009). 따라서 관련한 정책 연구 보고서와 국내외 문헌자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과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다.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가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정책 시행 주기인 5년을 단위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탈락하는 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1월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총 다섯 지역⁷⁾으로, 이들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자료는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분석 자료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내용적 변화와 핵심 가치 분석에 활용될 것이다.

4장은 문헌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여 파악한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여러 개념적 틀과 이론적 대안을 제시

7)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청주시, 아산시, 양산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

하는 장이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다음으로 정책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전략의 활용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요약정리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더하여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후속 연구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논의한다.

II.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1. 여성과 공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흐름

젠더 이분법⁸⁾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 그리고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사회와 문화, 제도와 관습, 지식의 생산과 학문의 세계 등 성별 이분법이 손을 뻗지 않은 곳은 없다. 지리학은 어떠할까? 공간과 인간에 대한 학문인 지리학 또한 다르지 않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젠더 중립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지리학적 지식은 남성의 시각과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Cope, 2002; 김현미, 2008). 지리학에서의 ‘인간’은 곧 ‘남성’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 사회과학 학문의 세계에 불었던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지리학 내에 공간적 법칙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공간 분석 열풍을 가져왔다. 이후 1970년대에는 인간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편성과 객관성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사람’이 제거된 지리적 연구는 현실의 반쪽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성의 움직임이기도 하였다(심승희, 2013).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 역시 곧 ‘남성’과 등치된다. 다시 말해 인간주의 지리학에서의 인간(man)중심주의는 남성(man)중심주의로 지리학의 남성중심성에는 변함이 없었다(정현주 역, 2011).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에 내재한 젠더 이분법과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간 배제되었던 타자화된 대상들을 학문의 장으로 끌어올렸다(정현주, 2013). 젠더화된 권력 관계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남성 중심의 지리학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BG, 1984; 정현주, 2013;

8) 이분법은 단순히 A와 B의 대립적 구조가 아니다. 이분법은 A와 A가 아닌 것의 관계이다(정현주 역, 2011). 따라서 젠더이분법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성과 비(非)남성을 지칭한다. A는 B를 타자화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배제되었던 타자들은 비(非)남성으로 대표되는 여성, 사적 공간, 비(非)이성애, 자연 등을 지칭한다(정현주, 2013).

Oberhauser *et al.*, 2017).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비(非)남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이 지리학 내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비가시화되는지, 또한 성차별적 억압이 공간 안팎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은 공간과 장소, 스케일과 같은 지리학적 문제의식을 거쳐 페미니즘 논의에 공간적 상상력을 더하는 역할로 이어진다(김현미, 2008). 공간과 젠더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교차하며 영향을 주고받듯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페미니즘 또한 상호 교차하며 새로운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페미니즘은 ‘물결(wave)’이라 불리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지닌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페미니즘의 제1물결은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제1물결 페미니즘의 중심이었다. 이후 1960대 후반에 제2물결 페미니즘이 일어났다. 제2물결 페미니즘은 초기의 급진적 운동과 후기의 문화주의 운동으로 구분된다.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성 억압의 뿌리인 사회적 성별 규범과 가부장제에 반기를 들었다. 여성의 성해방과 성폭력 반대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화주의 페미니즘은 운동은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 아래 여성성의 재평가를 강조하며 주로 개인적 의식과 일상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들)의 가장 큰 공로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공론의 장에서 언급조차 어려웠던 가정폭력 및 강간 등 여성 폭력의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이다(강경아 역, 2022).

페미니즘의 세 번째 물결은 제2물결 페미니즘이 지닌 여성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1990년대에 등장하였다. 제3물결 페미니즘은 크게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흑인 페미니즘과 제3세계 페미니즘 계열,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를 배경으로 둔 라캉(Lacan)과 푸코(Foucault) 등의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및 철학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계열로 나뉜다(정현주, 2016). 제3물결 페미니즘은 특히 여성 내부의 차이를 강조하며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며 구성되는 복수의 정체성과 위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과 페미니즘이라는 두 담론 영역에 걸쳐 있다(손명철 역, 1993).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또한 지리학의 개념적 틀을 활용하며

페미니즘의 다양한 물결과 함께 진동한다. 그러나 지리학의 페미니즘 수용은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이은희, 1984; 정현주, 2013). 지리학의 남성중심주의를 광범위하게 논의한 Rose(1993)는 이에 대하여 지리학이 여타의 인문사회과학 학문보다 남성중심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남성들의 지리학 지배는 ‘적합한’ 지리학적 지식을 ‘누가’ 생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해왔다(정현주 역, 2011).

Rose(2011)는 시간지리학과 인간주의 지리학이 지닌 서로 다른 남성중심성을 인문지리학 내의 이분법적 사고라 지칭하였다(정현주 역, 2011). 남성적이고 부르주아지적이며 인종주의적인 시각으로 몸을 억압하는 시간지리학의 남성중심주의는 포괄적 남성중심주의이다. 시간지리학의 사회적·과학적 남성중심주의는 포괄성을 위해 여성적 타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억압하였다. 즉, 여성은 시간지리학이 논의하는 장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다. 이에 반해 인간주의 지리학은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명제에 반대하고 사회적·과학적 지식을 구조화한 이분법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일면 페미니즘과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담론 모두 감정과 가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복원하였다는 점 또한 공통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주의 지리학이 논의하는 장소, 특히 ‘집’은 인간주의 지리학이 지닌 남성적 합리성을 규정하기 위한 전형적 여성으로 재현된다. 다시 말해 인간주의 지리학에서의 ‘여성’은 곧 ‘모성’과 등치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목적은 여성의 지리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기존 지리학 논의에 여성을 포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지리학 내 남성중심성이 은폐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인식론적인 도전에 있다(정현주 역, 2011).

표 1. 지리학 연구의 젠더화된 이분법 구조

시간지리학	인간주의 지리학
공적	사적
투명한	불투명한
사회적	육체적
지식	모성
합리적	감정적
공간	장소
남성적 관념	여성에 대한 남성적 관념
사회적·과학적 남성중심성 (social-scientific masculinity)	미학적 남성중심성 (aesthetic masculinity)

출처: 정현주 역, 2011, p.184.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역사적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다(Bowlby *et al.*, 1989). 지리학에 내재된 이분법과 남성중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리학자들은 페미니즘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리학의 논의와 범위를 무단히 확장해왔다. 1970년대 중후반에 걸친 초기의 페미니스트 지리학 논의는 ‘여성’ 범주를 포함하여 여성의 경험이 인문지리학 내에 부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Oberhauser *et al.*, 2017).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초기에 가졌던 관심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의 삶을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먼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리학 연구의 성차별적 편견을 비판하였다(Monk and Hanson, 1982). 또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지리학 내에 여성에 대한 논의와 여성 지리학자들의 입지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Zelinsky *et al.*, 1982). 초기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두 번째 관심사는 자원 접근의 젠더편향성이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지리학이 지닌 몰성성(gender blindness)과 남성중심성에도 도전하며 자원 접근성에 내재한 젠더 편향적 차별을 증명하는 실증적 연구를 전개하였다(손명철 역, 1993). 이 당시의 연구들은 시간 지리학자인 헤거스트

란트(Hägerstrand)의 시-공간적 접근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성역할 제한적 시-공간의 제약과 이에 따른 성역할 고착화 현상을 분석하였다(Palm and Pred, 1974; Pickup 1984).

한편 1970년대는 제2물결 페미니즘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연구의 열풍이 다시 일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주류이던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집합적 총체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속을 비판하며 떠올랐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속은 곧 노동계급 여성이 마주하는 이중적 차별을 기조로 하는 착취의 한 형태라는 것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핵심 주장이다. 자본주의가 형성하는 권력 관계와 자본의 착취성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지리학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Oberhauser *et al.*, 2017).

최초의 페미니스트 지리학 연구로 손꼽히는 Burnett(1973)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지리학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만남으로 요약된다. Burnett에 의하면 노동과 임금의 조건은 계급과 성, 그리고 인종에 따라 사회적으로 분화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도시의 형태와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정현주 역, 2011).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와 같은 공간의 젠더 이분법에 따라 발달한 도시 구조, 직주분리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손명철 역, 1993). 특히 McDowell(1983)은 도시 공간 연구가 성차(gender difference)를 고려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며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과거의 젠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주거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위치를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으로만 한정시키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실제 도시 계획 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Bowlby *et al.*, 1989).

이후 198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성별분업을 단순히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젠더 불평등의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관심이 기울어진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지리학(geography of women)’에서 ‘페미니스트 지리학(feminist geography)’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이 시기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페미니즘 문헌을 다양하게 섭렵하며 기존의 지리학 이론이 펼치는 상투적인 가정에 치열하게 도전했다(손명철 역, 1993). 1980년대는 백

인 부르주아지 중심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확장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의 장소로서의 집’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백인 중산층 가정 개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정현주 역, 2011). 집이라는 공간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가 닿지 않는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흑인 여성들에게 집이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장소라기보다는 백인 중심의 인종적 차별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자원이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Rose(2011)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일정 부분 인종차별주의와 공모했을 뿐 아니라 지리학 내 남성중심주의가 지닌 이분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90년대는 본질주의적 여성성에 초점을 맞춘 제2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확장되어 제3물결 페미니즘이 등장한 시기이자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논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전성기이다.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일상의 담론화된 권력을 해체하고 주변화된 목소리를 복원하며 일상생활 영역과 학문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정현주, 2013; Oberhauser *et al.*, 2017).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간의 물질적인 불평등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뛰어넘어 젠더를 정의하는 언어, 상징, 그리고 재현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김현미, 2008; 정현주, 2013).

주목할 점은 이 시기의 많은 페미니스트 지리학 연구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 노동 공간의 젠더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했다는 점이다. 젠더화된 노동 분업은 산업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맞물리며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을 드러낸다(김현미, 2008). Massey(1994)는 공간적 불균등이 젠더와 성차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로 규명하였다. 지역의 젠더화된 노동 시장의 통근 패턴과 이동성의 성차를 분석한 Pratt과 Hanson(1995)의 연구는 20세기 후반의 경제 재구조화와 교외화로 인한 공간적 변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했는지, 역으로 성별에 따른 지위와 접근성은 공간적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했는지를 밝혀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의 이동성 제약이 서구 중산층 여성의 교외화(suburbanization)를 심화하였으며 그 결과 ‘핑크 컬러 계토(pink-collar ghetto)’현상⁹⁾ 또한 심화되었다(England, 1993; Hanson

and Pratt, 1995). 이와 같이 젠더화된 노동분업과 연계한 공간 연구들은 젠더와 공간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규명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는 또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섹슈얼리티(sexuality), 정체성(identity), 성화된 몸(sexed body)과 같은 담론을 공간적으로 구축했던 시기이다. 1980년대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몸(body)을 경제와 합리성이라는 거대담론의 타자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몸을 비가시적으로 다룬 구조주의와 다름없었다(김현미, 2008). 몸에 대한 논의는 몸을 사회적 실천에 의해 각인된 표면이라 주장한 푸코(Foucault)와 몸은 텅 빈 표면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되는 재현물이라고 주장한 그로츠(Grosz)의 담론 위에서 확장되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몸의 차이가 곧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몸을 하나의 스케일이자 장소로써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하여 버틀러(Butler)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이론은 젠더를 생산하는 공간적 수행(performance)을 탐구하며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수행이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섹슈얼리티, 정체성, 성화된 몸과 관련한 연구로는 가령, 임신부, 환자, 장애인과 같이 '정상성'에 어긋나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장소 밖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거나 이성애적 공간(주로 공적 공간)에서 과잉남성성 또는 과잉여성성을 수행하며 새로운 퀴어(queer)공간을 창조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김현미, 2008).

2000년대 이후로는 가속화된 세계화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며 통합하는 유동적 연결과 경계에 집중하는 초국가주의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생산양식과 그것이 젠더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억압과 착취의 관계에 관심이 쏠렸다(김현미, 2008).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로컬, 중심/주변부, 북반부/남반구' 등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들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아닌 상호연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였다(Pratt and Yeoh, 2003;

9)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본인의 교육 수준과 기술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적 유동성이 높고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현미, 2008).

Swarr and Nagar, 2010).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과 연계하여 공간이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지리학 학문에 내재한 백인 우월주의를 분석하였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범이 백인 중심주의를 비판으로 삼은 인종화된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논증하며 페미니스트 지리학을 포함한 비판 지리학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Oberhauser *et al.*, 2017).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주요한 관심은 사회적 지형 변화에 따른 페미니즘(들)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주제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논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궤도를 그려온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페미니즘 논의를 가로지르며 매우 유동적으로, 때로는 결합적으로 새로운 질문과 논쟁 위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Oberhauser *et al.*, 2017). 변화하는 주제 속에서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 문제의식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목표는 바로 젠더 이분법에 따른 차별의 양상이 ‘공간’과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김현미, 2008; 정현주, 2013). 또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확장 뒤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한다(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BG, 1984). 다음의 절에서는 확장된 이론적 논의를 실천의 맥락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비판적인 관점으로 논의한다.

표 2.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흐름

페미니즘	연대	페미니스트 지리학
제1물결 페미니즘 - 자유주의 페미니즘 - 여성 참정권 운동	1910 ~	
	1960	
제2물결 페미니즘 - 급진적 페미니즘 - 문화주의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사회주의 페미니즘	1970	- 여성에 대한 지리학 (geography of women) - 지리학 내 여성 범주 포함 기술·기록 - 남성과 여성의 물질적 불평등
	1980	- 페미니스트 지리학 (feminist geography) - 단순한 기술에서 설명과 분석으로의 전환 - 젠더를 정의하는 언어, 상징, 재편, 의미의 중요성
제3물결 페미니즘 -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 흑인 페미니즘 -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 - 제3세계 페미니즘	1990	-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노동 공간 및 도시 공간의 젠더화 논의 -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 논의에 대한 비판
	2000 ~	- 주체성, 정체성, 성화된 몸(sexed body)의 공간적 구축 - 공간적 수행 탐구, 퀴어 공간 사례 탐구 - 초국가주의 페미니즘 바탕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제 논의 - 글로벌/로컬, 중심/주변부, 북반부/남반구 등의 이분법 스케일의 상호연관성 - 비판적 인종 이론(CRT)과의 결합

2. 공간과 실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비판

페미니스트 지리학 연구는 탈(脫)정치화된 지리학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지리학 연구의 목표를 현실 정치로 연계하여 지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정현주 역, 2015). 이때 공간은 페미니즘 연구의 관심사인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 해방의 정치’를 설명하는 메타포(metaphor)이자 연구 대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 활용된다(정현주, 2016). 이 절에서는 ‘공간’과 ‘실천’이라는 키워드 아래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이론적 핵심을 이루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비판을 검토한다.

1)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도시에 대한 권리(이하 도시권)는 1968년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도시권은 시민권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기조 아래 프랑스의 68운동¹⁰⁾에 참여한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공간을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것이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권의 핵심이었다(강현수, 2009; 이현재, 2012b).

르페브르에게 도시는 제품(products)이 아닌 하나의 작품(oeuvre)이다. 당시 프랑스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일상 또한 농촌보다는 도시의 생활양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도시를 농촌의 특징인 개인성, 동질성, 고립성에 대조하는 공공성, 이질성, 만남이라는 특징으로 정의하였다(강현수, 2009). 따라서 그가 말하는 작품으로서의 도시란 다양한 차이를 지닌 거주자들이 만남을 지속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합적 작품으로서의

10) 68운동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대규모의 학생·노동자·시민운동으로,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당시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68운동은 학생운동에서 노동자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며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도민영, 2011).

도시를 향유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에 의해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삶이 팍팍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생존에 필요한 사용가치(value in use)보다 이윤 추구에 필요한 교환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민들은 도시공간과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강현수, 2009; 2010; 황진태, 2010).

르페브르는 도시의 거주민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온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다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를 원래의 작품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도시의 모든 공간을 완전하고 충분히 사용하고(full and complete usage)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이다(이현재, 2012a; 강현수, 2014). 전유의 권리는 이윤 추구를 위한 사적 소유권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전유의 권리란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할 수 있는 권리이다(강현수, 2009). 따라서 도시의 거주민들은 도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할 권리를 지닌다(이현재, 2012a). 전유의 권리에 이어 도시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이다. 참여의 권리는 도시의 모든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칭한다. 또한 도시민들이 도시의 행정과 도시 공간 관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강현수, 2009). 따라서 참여의 권리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시 공간에서의 일상적 참여가 가능한 권리를 뜻한다(강현수, 2009; 2014).

정리하자면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는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의미하며 이러한 도시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권리가 필요하다. 첫째는 모든 도시 공간을 완전하고 충분히 사용하여 차이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인 ‘전유의 권리’이며, 둘째는 도시 공간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이다. 르페브르는 도시권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 그

리고 중심을 사용할 권리를 강조하였다. 이때 차이에 대한 권리는 ‘차이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different)’를 뜻한다. 즉 동일한 것으로 묶어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투쟁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강현수, 2009). 마지막으로 중심을 사용할 권리는 노동자, 이주민 등이 게토(ghetto)에 분산 또는 고립되거나 도심으로부터 주변화되어 교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특권화된 장소인 도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이현재,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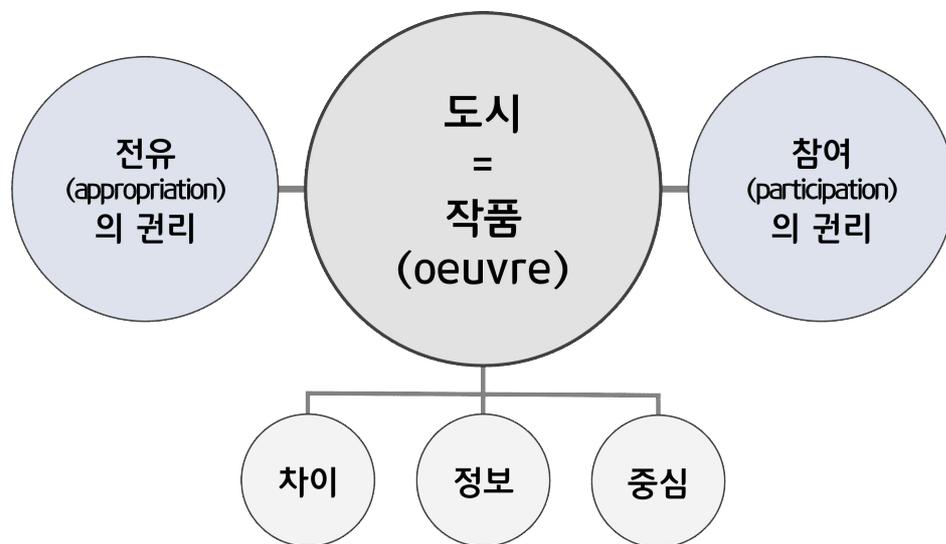


그림 1.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구성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복잡하고 난해한 유토피아적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Fenster, 2005; 강현수, 2009, 2014; 황진태, 2010; 김준호, 2011). 그러나 도시권 개념은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1960년대 후반 당시 프랑스의 68운동에 큰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도시사회운동의 실천 이념으로도 활용되었다(강현수, 2009; 2014). 도시빈민 문제가 팽배한 남미에서는 도시권이 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운동의 핵심 이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도시권을 헌법과 법률로 제정한 대표적인 국가이다(강현수, 2014).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서구 국가의 대도시 또한 각 개별도시 차원에서

도시권을 기초로 하는 헌장을 제정하였다. 도시권을 헌장에 담은 곳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다. 2006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는 도시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와 시민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리용(Lyon)과 낭트(Nantes), 스페인의 바르셀로나(Barcelona), 미국 워싱턴 주의 유진(Eugene), 그리고 호주의 스톤닝턴(Stonnington) 등의 도시가 도시권 헌장 운동에 동참하였다.

또한 유엔(UN) 산하의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에서도 전 세계 차원의 도시 정책을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가 논의한 도시권 구체화 작업의 핵심 주제는 첫째, 지방 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 둘째, 도시 공간 내 배제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셋째,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자유, 넷째, 도시 공간 서비스에 대한 권리로 요약된다(강현수, 2009).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비판

도시에 대한 권리는 시민권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사회에서 쉽게 배제되고 억압되는 소수자들(minority)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개념이다. 도시지리학자들은 도시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포용의 공간으로, 참여와 자원 접근성의 장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Whitson, 2017). 도시권이 도시의 접근성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새로운 시민성 논의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도시권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차이에 대한 권리는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권리에 대한 ‘공간적 전략(spatial strategy)’을 뒷받침한다(Fenster, 2005).

도시권에서의 도시는 명확하게 공적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르페브르가 이야기하는 작품으로서의 도시 공간은 페미니스트 연구가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백인 중산층 이성에 남성 규범적’ 공간인 공적 공간이다. 또한 르페브르가 주장한 차이의 권리는 차이 그 ‘자체’보다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오히려 젠더화된 권력과 억압의 맥락을 약화시킨다(Fenster, 2005). 다시 말해

도시권은 규범적인 지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부장제적인 권력관계가 도시의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내부의 차이와 도시권의 실현을 어떻게 저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이현재, 2012a). 따라서 르페브르의 물성적인 공적 영역 논의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일상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Fenster, 2005).

공공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에게 매우 제한된 접근성을 제공하는 배제의 장소이다(Young, 1989; Frazer, 1990).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공적 공간이 남성적이고 이성애 규범적이며 여성을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의 접근과 참여, 그리고 소속감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Whitson, 2017). 여성을 사적 공간에 등치시키는 관념은 물리적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끝없는 공간의 텅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공적 공간은 여성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자 진출해야 할 이상적 공간이 된다. 공공 공간에서 발생한 낯선 이에 의한 잔혹한 범죄는 미디어에 의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전달되며 여성들의 두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실제로는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지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공공 공간에서 낯선 자에 의한 피해를 당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호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여성이 갖는 두려움의 역설(paradox of women’s fear)’이라 한다(Kern, 2019).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Valentine(1989)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피할 것인지보다 어떠한 ‘장소’를 피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곧 두려움의 지리(geography of fear)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이 갖는 두려움의 역설은 결국 여성을 사적 공간에 매어놓음으로써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을 지지하며, 남성이 가진 권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기초적인 공간적 성차별의 원리인 것이다(Kern, 2019). 이처럼 도로, 대중교통,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Fenster, 2005).

그렇다면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도시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Fenster(2005)는 이에 대한 해답을 Michel de Certeau(1984)의 저작 『일상생활의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에

서 찾는다. Certeau(1984)에 따르면 “공간은 실천적 장소”이며 공간에 대한 소속감은 공간에 대한 전유권이 반복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형성된다. 즉 공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은 걷기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신체적 사용으로 친밀감과 기억, 그리고 공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의 성역할(gender role)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사적 공간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성되는 감각은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장소감에도 연결된다. 가령 어떠한 여성들은 가부장제적 성차별이 작동하는 가정보다는 익명성을 지닌 도시 공간에서 더욱 안전감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여성들은 사적 공간인 집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도시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Fenster, 2005).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논의할 때에 반드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역학, 젠더화된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도시계획 및 개발, 행정 및 정책 그리고 여성학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먼저 도시공간의 계획과 개발 분야의 연구는 여성친화 요소와 여성친화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송향숙, 2012; 송향숙·박태원, 2013; 채은주·변병설, 2013; 채은주, 2014; 전혜림, 2016; 전혜림·양승우, 2015; 한연동·김천권, 2017; 박미영, 2018; 한연동, 2018; 허순평, 2020). 계층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등의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 계획 및 개발 분야의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시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가 지닌 젠더 편향적 관점과 성별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의 이상(ideal)인 이성애 유(有)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삼아 여성의 삶을 결혼과 출산으로 귀결 짓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이 해체하고자 하는 성별이분법에 따른 공간적이분법을 오히려 재생산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 연구 보고서를 포함한 행정적·정책적 연구는 전문가와 시민 대상의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각 해당 연구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김소림, 2016; 임현정, 2016; 김희성·김진, 2017; 김혜정, 2018; 장부년, 2018; 한동호, 2019; 박은순, 2020; 백효진·임효순, 2020). 이들 연구는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적용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논의를 심화하고, 시민 대상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파악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확실한 분리 등과 같이 단편적인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거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함에 있어 여성의 참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은

젠더화된 공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별, 인종, 장애여부, 성적체성, 종교 등 모든 차별적 요소에 반대하고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시민의 응답을 분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 더하여 여성 집단 내에서도 연령과 계층, 그리고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학 관점의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조명하는 접근(조영미, 2009; 조명희·공미혜, 2014; 홍선영, 2015; 성지혜, 2016)과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한 접근(도승연, 2009; 안숙영, 2011; 이현재, 2012a; 봉귀숙, 2014; 주혜진, 2016; 문재원, 2017; 김혜정, 2018)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는 여성 정책의 한 부류인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여 공간과 사회의 상호구성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비교 지역 및 공간에 대한 지리적 스케일의 차이와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의 선행연구로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기 위해 시행된 각 지역의 정책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정책보고서의 특성상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주로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같은 유엔(UN) 산하 기구의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의제문과 정책 제안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라는 용어는 2006년 3월부터 3년간 터키의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유엔 협력 프로그램(UN Joint Programme)의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Women Friendly Cities Proje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Sipahi and Örselli, 2012). 따라서 이전의 연구는 비(非)성차별 도시(Non-sexist

city), 공평 분배 도시(Fair Shared City), 성인지 도시(Gender-Conscious City)와 같은 용어로 성평등한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했다는 특징을 보인다(Hayden, 1980; Eurocultures *et al.*, 1994; 이재경 역, 2018).

표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선행연구 분류표

구분	내용 및 한계
도시계획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여성친화 요소 및 평가지표 설계·분석 - 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 연구 위주 - 젠더 편향적 관점의 무비판적 흡수로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행정학 정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분석 -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적용의 결과와 한계 분석으로 정책 시행 우선순위 파악 -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확실한 분리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중점 -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함에 있어 여성의 참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여성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 지역 사례연구 및 젠더 거버넌스 조명 -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간과하는 지점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적 분석 - 비교 공간에 대한 지리적 스케일 및 요소 혼동 또는 간과 - 공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각 지역의 정책 연구 보고서 - 유엔(UN) 산하 기구의 정책 연구 보고서 - 비(非)성차별 도시(Non-sexist city), 공평 분배 도시(Fair Shared city), 성인지 도시(Gender-Conscious city) 등 성평등한 도시 계획 및 개발을 위한 연구

Ⅲ.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공간의 여성주의적 실천?

1.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

1) 여성들의 공간 되찾기(Take Back the Night)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뿌리는 1970년대 중반 북미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공간 운동에 있다. ‘밤길 되찾기’, ‘밤길 안전 캠페인’ 등으로 알려진 Take Back the Night(이하 TBTN) 운동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과 성폭력 인식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시작되었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에 따른 여성해방 운동이 고조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색인종 여성 대상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다양한 양상의 여성 폭력에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열게 된다. 이후 1975년에 발생한 또 다른 여성 살해 사건¹¹⁾은 TBTN 운동이 여성 폭력을 반대하고 여성의 안전한 공간 이용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TIME, 2011; Heldman *et al.*, 2018; Take Back the Night Foundation, 2022).

미국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뉴욕, 캐나다 밴쿠버 등 북미 도시의 밤거리에서 여성들이 쏟아져 나왔다.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도시 공간을, 모든 시간대에, 안전하고 당당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즉 TBTN 운동은 단순히 밤(night)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아닌 ‘공간’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다.(Kern, 2019). 공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11) 1975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생물학자 Susan Alexander Speeth가 퇴근 후 집으로 걸어서 귀가하는 길에 강간 및 살해를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그의 집에서 고작 한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추모 캠페인에서 여성 운동가 Anne Pride가 Take Back The Night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하였다. TBTN 운동은 이후 공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세계적 운동이 되었다(Heldman *et al.*, 2018).

그치지 않는다. 두려움은 여성의 행동을 제한시키고 특정 구역과 시간을 피하게 하며 동행자가 없는 이동을 제한시킴으로써, 결국 여성을 집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공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공간 이용과 사회적 교류, 그리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itson, 2017). 이러한 악순환이 여성은 사적 공간, 남성은 공적 공간에 연결 짓는 공간적 이분법의 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림 2. 1979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TBTN 운동
출처: TAKE BACK THE NIGHT Foundation

1990년대까지 이어진 TBTN 운동은 ‘Reclaim the Night’, ‘Reclaim the Street’ 등의 이름으로 이어지며 공공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 특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시정(市政)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Femmes et Ville(Women in City)’가 조직되었다. Femmes et Ville는 먼저 CAFSU(The Committé d’Action Femmest et Sécurité Urbaine, the Women’s Urban Safety Action Committee)를 설치하고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였으며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서 두려움과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정책을 시행하였다. CAFSU는 주로 버려진 공터, 후미진 곳, 어두운 장소 등을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이후 몬트리올에서

는 여성과 안전한 도시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무장애(Barrier-Free) 공간, 보편적 접근권이 확보된 차별 없는 도시 공간을 사유하기에 이른다(유희정 외, 2010)

한편 199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가 Eva Kail과 Jutta Kleedorfer에 의해 기획된 ‘Who Owns Public Space? Women’s Everyday Life in the City(누가 공공 공간을 소유하는가? 도시에서의 여성의 일상)’라는 주제의 이동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은퇴한 노인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까지 각기 다른 비엔나 시 여성들의 하루 일상을 기록한 사진을 비롯하여 불평등한 이동권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판넬 전시물로 구성되었다¹²⁾. 주로 남성의 시선으로 계획되고 조성된 도시의 공간이 특히 안전과 이동성(mobility), 그리고 연계된 교통체계의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전시가 다룬 주제, 가령 대중교통과 두려움, 일상의 기반 시설, 놀이, 그리고 소속과 공공 공간 등은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논의를 이끈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김양희 외, 2008; The Guardian, 2019; Jackowska and Novas, 2022).

여성들이 도시의 일상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외쳤던 TBTN 운동에서부터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논의가 시작된 지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간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국경을 뛰어넘어 ‘공간적 성차별’이라는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젠더화된 이분법이 새겨진 공간에 갇힌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친화적 도시 개념의 뿌리는 공간의 텃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과, 여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던 페미니즘의 제2물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BTN 운동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아래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운

12) 전시는 사진으로 총 여덟 명의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었다. 8살의 소녀, 16살의 사진 수습생,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 자녀를 가진 주부, 터키 출신의 두 자녀를 가진 주부,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간호사, 휠체어를 사용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프리랜서 노인 여성, 그리고 은퇴한 여성이 피사체로 담겼다. 8명의 일상 루틴(routine)과 이동을 기록하여 도시 공간 내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Jackowska and Novas, 2022).

동이었던 점은 공간에 새겨진 젠더화된 이분법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Kern, 2019). 이는 제2물결 페미니즘이 직면하였던 본질주의적 여성성 강조에 대한 비판과 서구의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삶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강경아 역, 2022; Jackowska and Novas,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TBTN 운동은 여성을 향한 폭력의 양태와 젠더 이분법이 도시의 공간과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2)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정책으로 실현된 과정에는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이 있었다(유희정 외, 2010). 이때 정책의 성 주류화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gender)에 따른 관심과 경험을 주요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남성 지배적인 주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2005). 성 주류화 전략의 특징은 정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와 같은 정책적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김양희 외, 2008).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공간에 대한 요구는 각 지방 정부의 공간 정책에 여성의 시각과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한 변화에 발맞추어 의제(agenda)를 공표하였다.

1990년대는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의제가 대두되었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성평등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이미원, 2009; 조선주 외, 2017). 여성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의 삶을 고려한 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국제기구의 논의는 계속되었다.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

이하 유럽현장)은 성 주류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공간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연계하여 도시 공간 정책 논의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정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럽현장은 도시공간과 주거,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과, 공간에서 여성들이 비가시화되는 문제점을 필두로 하여 도시공간 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12가지의 과제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Eurocultures *et al.*, 1994; 조영미 외, 2009; 조선주 외, 2017).

표 4. 도시 여성들을 위한 유럽현장 주요 내용

핵심 선언	내용
1. 능동적 시민성	- 여성의 도시계획 참여를 위한 실질적 대표성 확보 - 성차별 근절 및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인정
2. 민주적 의사결정과 형평성	- 도시공간, 주거, 교통, 도시 계획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
3. 기회의 평등	- 사적 공간과 여성을 연계하는 성차별적 교육 내용 변화 및 도시 공간 계획 분야의 여성 참여 기회 확대
4. 참여 증진	- 여성 참여 증진 및 여성 연대 기반 마련 - 복지행정, 공공기금관리 분야의 정보 접근권 및 의사결정권 확대
5. 여성의 일상적 삶의 정치 의제화	- 여성의 일상 경험 반영에 기반을 둔 사회적 소수자 그룹의 가시화
6. 지속가능한 발전	- 자연과 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감수성(민감성)을 반영한 생태계 보전
7. 사회적 안전과 이동성	-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및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 경제, 문화적 삶 보장 - 여성의 안전 확보
8. 주거와 정주권	- 여성의 능동적인 도시 공간 이용을 위한 사적·공적 공간의 개조 -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 보장
9.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	- 성인지 관점의 새로운 도시 공간 구성 -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생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10. 교육에 기반을 둔 적용과 실천	- 학교, 건축·도시계획 연구소, 대학에서의 성인지 교육 -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적 스케일의 실험과 연구
11. 미디어의 역할과 홍보의 중요성	-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및 관행 극복 - 성평등한 도시 계획 및 건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12. 네트워킹 강화	- 정보 교류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 조성 과제 발전 - 유럽 전역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로 여성 연대 강화

자료: Eurocultures *et al.*, 1994 재구성.

유럽현장은 단순한 물리적 차원에서의 도시 공간이 아닌 사회의 성별 이분법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는 공간 지형을 다양한 주제로 드러낸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의 여성 참여부터 안전과 주거, 그리고 여성들의 연대에 기반을 둔 네트워킹 강화까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담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더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도시계획과 환경, 이동성, 사회적 안전, 주거, 전략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핵심 내용과 연관된 기초적인 기준과 연구 내용, 그리고 실행 예시를 덧붙여 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성 주류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 정책과 관련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제회의이다. 189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써 성 주류화를 채택한 ‘유엔 베이징 행동강령(UN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이 발표되었다(유희정 외, 2010; 조선주 외, 2017; 성평등 아카이브, 2022). 세계적인 성 주류화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밑거름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따라서 각 지역 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개조하기 위한 성평등 공간 정책과 정책 성 주류화를 위한 단초는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 있다(조선주 외, 2017).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이후 1996년에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 II(UN-Habitat II)의 ‘인간 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이하 이스탄불 선언)’이다. 이스탄불 선언은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여성의 관점과 삶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들이 인간의 정주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주는 인간의 활동과 공간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용어로 공간과 사회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희정 외, 2010). 이스탄불 선언은 인간 정주를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의 성평등 관점을 강조하며, 여성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 공간의 설계와 구성, 그리고 관련 정책에 젠

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주 실현의 기본임을 천명하였다.

표 5.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논의 흐름

연도	내용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 환경선언 - 여성의 주거권 확보 주장 및 성평등한 정주 환경 조성 논의 확장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여성들을 위한 유럽헌장 - 도시 계획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배제와 공간 내 여성 비가시화 논의 - 12개 과제 제시 및 공간의 다차원적 측면 논의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세계여성대회, 유엔 베이징 행동강령 - 성평등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개조 논의 - 공간 정책을 포함한 세계 여성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공론화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이스탄불 유엔정주회의 - 성평등한 인간 정주 개념 발전 및 도시 공간에 대한 젠더 특성 고려 논의

2.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

여성 친화적인 도시와 공간의 개념은 앞서 논의하였듯 1970년대 중후반의 제2페미니즘 물결을 타고 시작된 공간에 대한 여성 운동과 이후 촉발된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의 개념이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실현된 과정과, 정책 시행 이후 10여 년이 흐른 시점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분석한다.

1) 정책 시행 배경

한국에서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이하 협회)가 2004년에 개최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 세미나>이다. 협회는 비장애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의 구조와 건축물이 공간적 차별을 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성 신체와 다른 신체조건과 상황을 지닌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설계를 추구하는 여성 친화적 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는 협회가 『여성친화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2006) 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부터 담론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조영미 외, 2009; 김영화, 2010). 연구가 그려낸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은 공원, 공공건물, 주차장, 교통 시스템과 같은 도시 내 공공 공간을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간으로 개조한 모습이다(한겨레, 2007). 또한 연구는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을 위한 주요 요소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을 제시하며 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참여정부의 영향으로 행정복합중심복합도시(현 세종특별자치시) 등 신도시 건설의 열풍이 불었던 때이다(국무조정실 외, 2003; 대통령 비서실, 2004).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성별영향평가와 성 주류화 전략 또한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김포 신도시 건설사업, 대구광역시 혁신도시(팔공이노벨리)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이상문 외, 2006; 류형철

외, 2007). 공간의 성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건설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시도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에도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상 경험과 니즈(needs)를 반영한 공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양희 외, 2008). 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과 북미의 성평등 공간 정책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며 협회와 같이 물리적 공간 위주의 논의를 이어 나갔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앞서 여성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여성 정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던 정책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정책, 일명 ‘여행(女幸) 프로젝트’이다.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수행한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연구에 기반을 두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여행(女幸) 프로젝트의 이름 아래 여성 시민들의 공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간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책의 주요 목표와 대표적인 사업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 추진 영역별 목표 및 대표 사업

영역	목표	대표 사업
돌보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접근성 확대 ■ 보육서비스 다양화 	공공보육시설 확충,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노인·장애인·노숙인 지원
일있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창업 지원 ■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멘토링,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강
넉넉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접근성 확대 ■ 여성 여가 증진 	문화시설 내 여성친화시설 개선(놀이방, 유아차 대여), 여성친화 문화시설 건립, 여성을 위한 음악회, 정보 접근성 확대
안전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위험/밤길 안전도 ■ 성폭력 등 범죄 예방 	안전한 주거단지 설계, 안전한 지하철도 관리, 무장애 1등급 도시 만들기, 여성 콜택시 제공,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
편리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편의성 증진 ■ 대중교통 이동 및 접근성 향상 	공중화장실 여성 변기 수 확대, 버스 손잡이 높이 개선, 여성 배려 팹크 주차장, 여성친화도시구현 도시계획 규정 보완

자료: 김양희 외, 2008 재구성.

2007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시행된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돌봄, 일, 문화, 안전, 편의 영역에서 여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공간과 연계된 여성 정책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신도시 건설 사업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내용이 주로 자녀가 있는 중산층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거나 물리적 공간의 가시적인 변화에만 편중되어 있는 한계가 나타났다. 특히 하이힐(high heel)을 신는 여성을 고려한 보도블록 설치와 여성을 배려하는 분홍색 주차장과 같은 사업은 젠더 편향적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2등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TIME, 2009; 조영미 외, 2009; 김영화, 2010; Kern, 2019). 그럼에도 여행(女幸) 프로젝트 시행이 가져온 여성 정책의 다변화는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공간과 여성의 관계를 고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또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¹³⁾.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지역 정책 전반에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여성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활기찬’ 이미지의 도시적 공간(이미원, 2009)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이다.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는 익산시의 요구에 응답하여 2009년 3월 익산시를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2008)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익산시가 설정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목표는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이다. 이후 12월에는 여수시가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표어로 하는 2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하향식(Top-down)의 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정책을 지향하고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도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

13) 2009년 3월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작은 2008년 1월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당시 성공적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던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정책-여행(女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계획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체의 수를 늘리는 큰 계기로 작동하였다(이상문 외, 2006; 김양희 외, 2008).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시행된 지 12년차인 2022년 1월 현재 총 95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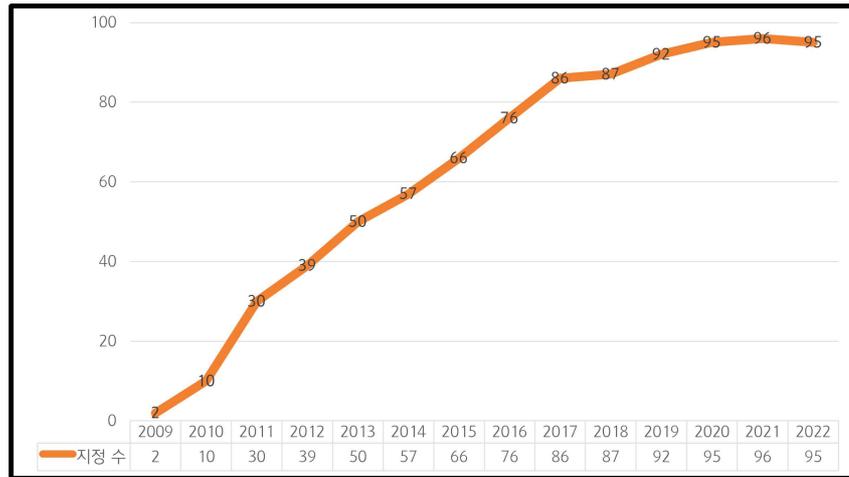


그림 3. 여성친화도시 지정 수 변화 추이

한편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2015년 7월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면서 정책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조선주 외, 2017).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밑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실제적인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1995년 제4차 베이징 국제여성대회를 계기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08-’12) 등을 근거로 시행되었다(유희정 외, 2010)¹⁴.

14)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2002년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규정(10조)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2) 정책의 변화와 특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또는 지역(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9;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덧붙여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소개한다. 다시 말해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배려의 도시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정의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 대상으로 설정하여 5년을 주기로 단계 평가 및 재지정을 시행한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의 기본적인 틀 역할을 하는 추진 목표와 가치는 법적 근거의 제정과 중앙 정부가 설정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따라 변화해온 경향을 띤다. 초기의 여성친화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배려의 도시’를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이미원, 2009). 이후 2010년에는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 중 ‘친환경’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녹색성장’ 키워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3월에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의 목표 중 하나인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이 삭제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상위목표로 전환된다(국무조정실, 2013; 조주은 외, 2016; 조선주 외, 2017).

종합하자면 초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논의와 서울시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책의 영향에 따라 도시 계획 및 건설과 건축 등 물리적 공간 조성 및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정권

이 추구하는 핵심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여성의 삶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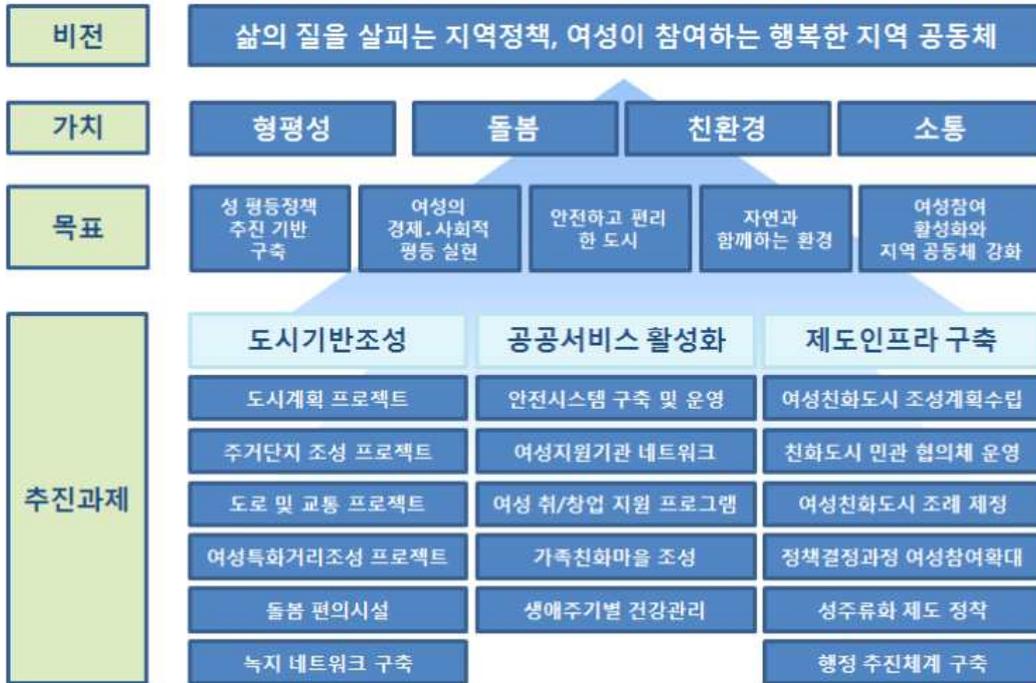


그림 4. 2010년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출처: 유희정 외, 2010, p.64.



그림 5. 2016년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출처: 여성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2017, p.13.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각 지역은 5년의 정책 시행 기간 이후 단계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의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거나 재지정 단계에서 탈락하게 된다(조선주 외, 201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가치와 세부 목표가 변화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의 발전 모델 및 단계의 정의 또한 변화해왔다. 먼저 여성친화도시가 처음 지정된 해에 발행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2009)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발전 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1단계는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연구는 서울시가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으로 채택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2단계를 지역발전의 특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인 3단계는 유럽의 국가들이 성평등한 도시계획을 추진한 것처럼 ‘젠더 시티(gender city)’ 전략으로 통합적 도시를 구현하는 단계로 제안하였다(이미원, 2009).

이후 여성친화도시의 시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시행 단계별 발전방안연구』(2017)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정의와 조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0단계에서부터 3단계로 이어지는 시행 단계의 세분화한 정의를 내렸다. 먼저 0단계 도시는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받는 단계의 도시이다. 1단계 도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핵심 목표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후 여성가족부로부터 처음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다음으로 2단계 도시는 ①경제활동형, ②돌봄형, ③안전형, ④문화/교육형, ⑤마을공동체형, ⑥복합형의 총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 유형별 도시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인 3단계 도시는 여성친화‘선언’도시로 여성가족부의 계획과 지침을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자체적인 자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도시를 말한다(조선주 외, 2017).

이러한 정책 시행 단계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 정의의 모호함은 여전하다. 여성가족부로부터의 재지정으로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된 것은 각 지역과 지방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전환되어 단계별 발전 방향의 내용을 다시금 납작하게 만든

다. 이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3단계 도시로 재지정된 다섯 지역의 주요 사업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1월 현재 3단계로 진입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북구여성행복지원센터, 여성친화마을설계사(광주 북구), 여성희망창작소 운영(광주 동구),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충북 청주),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충남 아산),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부서협업체계 구축(경남 양산)을 들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 배포자료, 2022).

표 7.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의 대표 사업

지역	사업명	내용
광주 북구	북구여성행복지원센터 여성친화마을설계사	- 출산·육아, 경력단절 어려움 겪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 사업 - 우수 여성친화마을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광주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센터 개소 - 창업마중물방, 돌봄방, 공유방 등
충북 청주	여성친화기업인증	- 여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여성편의 화장실 설치 등
충남 아산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 기반의 성매매집결지의 양성평등거리화 - 여성커뮤니티 센터, 사회적 약자 쉼터 조성
경남 양산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	- 주무부서 성 주류화 권한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총괄부서 역할)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 배포자료, 2022 재구성.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거리를 조성하는 등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변화와 일·가정 양립, 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주로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자녀가 있는 중산층 여성에 초점을 두어 젠더 편향적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다. 물론 일·가정 양립과 돌봄이라는 무게가 아직도 주로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을 시행해온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이 정책 시행 초기의

논의가 지녔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지정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례¹⁵⁾에서도 나타난다.

표 8. 여성가족부 선정 우수 사례(2012년~2021년)

연도	지역*	내용
2012	인천 부평구 (1)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여성친화마을 플래너 양성, 여성친화마을 아카데미 운영
	전북 익산시 (1)	여성리더(여성친화마을조성 사업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 인프라 취약 지역 ‘여성친화시범구역’ 지정
	경북 영주시 (1)	지역 특화 섬유산업 여성기능 인력 양성, 여성 대상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여성 경제적 자립 기반 제공
	경남 창원시 (1)	‘우리동네 한바퀴’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 읍면동 지킴이단 운영, 안전망 구축
2013	여수시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장보기·쇼핑을 위한 바구니 탈부착 가능 공영자전거 사업, 유아차 무상대여·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등 도시 환경 개조
	경기도 시흥시 (1)	지역사회 안전증진 여성 지역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군자 배곧 신도시 건설, 정왕동 ‘여성친화도시 시범사업’
	대구 달서구 (1)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달서 여성행복카페’ 구축·운영 및 시책 제안, 일상 불평·불안요소 게재 및 정보 공유로 주민 참여 도모
2014	전북 익산시 (2)	결혼이주여성과 마을 여성노인의 공동 텃밭 가꾸기 사업, 도농 여성단체 회원 간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네트워크 형성
	경기 시흥시 (1)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구 대상의 ‘가족품앗이’ 사업 운영, 주민센터 내 돌봄 공간 조성으로 돌봄 공백 해소
	부산 사상구 (1)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자녀양육·모성보호 지원 제도 정착에 기여,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확충, 수유실 설치 등
	서울 서대문구 (1)	심야시간대에 정류소 이외의 원하는 곳 하차 가능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사업 운영으로 안전 귀가 지원

15)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정책을 시행한 지역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의 정부포상을 받은 지역의 대표적 사업(2012년~2021년)으로 소개된 사례이다. 이 가운데 2014년도의 사례는 수상 사례가 아닌 보도자료 내 우수 사례로 소개된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2015	경기 안산시 (1)	안전 조례 제정, 전국 최초의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추진, 24시간 어린이집, 보육OK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대구 수성구 (1)	수성여성클럽 및 여성일자리 활성화, 여성친화 인증기업 협약 체결 등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경북 김제시 (1)	여성인재풀(pool) 운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친화테마공원 조성, 가족친화형 마을지킴이 운영
2016	부산 사상구 (1)	‘여성친화희망기업’ 선정으로 여성 친화 기업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천 부평구 (2)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49%),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으로 양성평등 교육 실시
	경기 의정부시 (1)	일자리, 교육, 안전, 도로, 도시계획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서부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함
2017	대구 달서구 (2)	‘달서여성일자리단’ 구성으로 직업훈련, 취업연계, 동행 면접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경기 수원시 (2)	여성문화공간-휴(休)센터 설립 및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휴센터: 휴식 공간, 건강문화 공간, 일시보육시설, 장난감 도서관, 맘카페 등)
	대전 서구 (1)	원·투룸 밀집지역 여성들의 안심거주 환경 조성, 성폭력·강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위한 여성안심 병원 협약 체결
2018	광주 북구 (2)	‘여성친화 특화마을’ 운영으로 동(洞) 단위 의 여성 주도 공동체 활성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경기 고양시 (1)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민관 협력 강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지역 여성 역사 콘텐츠 개발로 성평등 역사 인식 확산
	대전 대덕구 (1)	돌봄방, 창작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대덕마더센터’ 조성,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도시재생, 안전 공간 조성 등) 운영
2019	대구 수성구 (2)	수성여성클럽(여성 일자리 진담 기관) 확대 추진으로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경기 부천시 (1)	‘부천에꿈(aequum: 평등)’ 구성으로 안정적인 민관 협력 활동 기반 조성 및 마을 사업 실행 주체로의 성장
	서울 서대문구 (2)	여성 독립운동가 테마 ‘여기로(여성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길)’-지역 특성화 거리 조성, 주민해설사 양성으로 주민 참여 강화

2020	전남 강진군 (2)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 ‘푸소(FU-SO) 체험(농촌민박 및 영농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
	경기 용인시 (2)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함께 쓰는 육아 일기’ 등의 돌봄 관련 사업
	충북 청주시 (2)	지역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 네트워크 운영,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및 마을 돌봄 활성화
2021	충남 아산시 (2)	도시재생사업 마당의 양성평등거리 조성, 도시재생과-여성가족과 사업 추진 체계 마련
	충북 제천시 (2)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추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분야 확대
	서울 도봉구 (2)	양성평등전문관(젠더전문관) 제도 도입,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 사업 추진, 성평등 건강도시 조성 추진

* 괄호 안 숫자는 우수사례 선정 해당연도 당시의 지정 단계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 배포자료(2012년 ~ 2022년 보도) 내용 재구성.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 사례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에 참고가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정책 보고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2016)에 소개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정 단계 차이가 있는 지역 간의 사례와 선정된 지역별 사례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그 내용 또한 대부분 돌봄과 안전,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즉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시행 단계와 세부 목표는 변화해왔지만 정책 내용의 발전과 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익산시와 여수시를 포함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 초기에 지정 받았던 여러 지역들이 재지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 또한 천편일률적인 정책 내용과 정책 방향의 애매모호함,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저하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조주은 외, 2016; 전북도민일보, 2021).

3.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지역의 호응을 얻으며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왔다. ‘공간’적 관점을 투영하여 여성 정책의 폭을 넓혔으며, 무엇보다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미시적 차별의 양상을 주목하게 하는 등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정책의 내용적 변화와 발전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내용 발달의 느린 속도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체감도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갈래로 추릴 수 있다.

1) 단일 범주화된 여성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이 그리는 여성의 범주가 여전히 ‘어린 자녀가 있는 중산층 여성, 보호받고 배려 받아야 할 존재’로 단일 범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시행되는 여러 사업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주로 ‘돌봄, 가족’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과 일자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관한 사업 또한 다르지 않다. 각각의 사업은 결국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즉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모델인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받았던 비판의 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책은 여성을 ‘이성애 핵가족 내의 여성’으로 정형화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조영미 외, 2009). 직장과 같은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은 흡사 공(public)-사(private)로 구분되는 공간적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돌봄의 영역이 ‘여성의 영역으로서의’ 공적 영역으로 함께 확대되어 여성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내 사업의 한 축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의 목적은 분명 “여성이 돌봄 역할

을 더 잘 할 수 있도록(최유진 외, 2019)” 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영역과 논의의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돌봄의 사회화’에 있다. 그러나 ‘가족’의 키워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 내에 포함되어 실행되는 것은 여전히 ‘이성애적 핵가족 내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의 반복으로 이어질 뿐이다. 다시 말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젠더화된 공간 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성차별적 양상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마을 관계는 [그림 6]과 같이 ‘여성친화도시’가 ‘가족친화마을’을 완전히 포용하는 형태가 아닌, 부분적으로 교차되어 접점을 지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마을 관계

출처: 유희정 외, 2009, p.95.

여성친화도시 정책 내용에서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주제는 ‘안전’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형성된 배경에 있다. 1970년 중반 제2페미니즘 물결에서 파생된 여성들의 공간 되찾기 운동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안전한 공간의 확보 요구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의 필요성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안전 키워드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맞물려 정책으로 공간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쉽게 체감하

게 한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요인들이 각 지자체가 안전을 주제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로 작동한 것이다(조주은 외, 2016).

여성친화도시 정책 중 시민 참여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민·도민참여단의 역할은 대부분 지역 공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유진 외, 2015).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공중화장실 내 여성안심벨 설치, 안심 택배함, 여성안심세트¹⁶⁾ 제공 등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안전과 관련한 사업 운영으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최유진 외, 2015; 국토교통부, 2021; 뉴제주일보, 2022). 이러한 점은 여성의 삶에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에서의 여성상이 ‘보호받고 배려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그려져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느끼는 위협과 두려움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지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안전과 여성을 엮는 논의의 반복은 결국 여성을 피해자성(victimhood)에 갇히게 한다.

그렇다면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논의하는 여성의 범주가 계속해서 ‘자녀가 있는 중산층 여성,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단일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모성’과 ‘약자’로 축약되는 여성의 범주가 사회와 공간 구성의 기본 값인 ‘이성에 중산층 핵가족 내 남성’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선 ‘안’의 범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약자로서의 여성’은 이성에 중심 가부장제적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상이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에 덧붙여 정책의 명칭에서의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어임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여성친화도시가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 시행의 배경과 맥락은 삭제된 채, 그저 모든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정책으로 희석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최유진, 2016).

16)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이중 장급 안전장치, 홈캠, 문 열림 감지 센서, 호신벨 등의 안전장치 및 기기를 지역 거주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두 번째 문제는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이다.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도시 공간을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을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조주은 외, 2016). 조례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조례상의 정의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내용 또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조성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정책의 내용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여성 친화적 도시라는 개념이 도시 내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제고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조영미 외, 2009). 이때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은 한국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담론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인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2006)가 정의한 여성친화도시의 네 가지 분야에 해당한다. 즉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논의와 함께 진행된 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집중되어 시행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짓는 것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무시하는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1970년대 북미의 여성들이 전개하였던 공간 되찾기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분법적 젠더차별에 따른 여성 폭력을 반대하고, 성차별과 함께 작동하는 공적-사적 공간의 이분화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에서의 ‘도시’는 도시 공간(urban space)을 의미한다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 밀집하여 함께 생활하는 권역을 이루는 일상 공간(everyday space)을 의미한다(유희정 외, 2010). 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가 단순한 도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역의 지리적 스케일과 인구 규모는 상이하며 도시적인 스케일이 아닌 지역 또한 다수이다. 가령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처

음 지정되어 2016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역 전체가 여성친화도시에 해당되지만 ‘농어촌 권역’으로 불리는 지역 또한 해당 행정구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닌다(이해응 외, 2020).

이러한 정책의 명칭과 지리적·행정적 스케일의 불일치는 여성과 공간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해외의 선행 연구와 사례로부터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지리적 스케일과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신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유인 요소가 필요하였다(이상문 외, 2006; 김양희 외, 2008). 마찬가지로 많은 자원과 기반 시설을 지닌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정책은 지방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도입하는 정책 모델이 되고는 한다. 서울시가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는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에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을 먼저 요구를 하게 된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⁷⁾.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커요. 그런데 지정기준들이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가령 위원회를 구성할 인력풀도 부족하고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솔직히 대도시가 아니면 우리같은 지역에는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성이 없는데 여성위원을 40% 이상 채우라고 하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공무원)

그림 7.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 지역의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출처: 조주은 외, 2016, p.35.

17) 익산시는 2008년 1월 주요 시책 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추진하였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는 여성부에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 지정 사업을 제안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회 및 워크숍, 시 진 직원 교육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2009년 3월에 여성부 지정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되었다(익산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정책 명칭의 스케일과 지역의 지리적 스케일의 미스매치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조주은 외, 2016).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정책 보고서의 내용과 재지정을 위한 평가·성과지표 등의 내용이 도시 스케일의 공간과 다른 구조와 스케일을 지닌 지역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연구보고서 또한 도시, 공간, 지역 등 공간적 개념과 스케일을 혼용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2010)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도시’가 도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 정책 영역 간의 연계와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도시의 기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며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유희정 외, 2010).

공간과 지리적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부터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시민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데에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목표로 설정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참여’이며, 참여는 거버넌스 개념과 함께 정책 시행 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공간 변화, 거주 지역 및 생활공간과 정책명칭 및 정책 시행 스케일의 미스매치가 정책에 대한 지리적 소외(geographical isolation)를 불러 일으켜 정책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낮추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때 지리적 소외란 장소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이 없이 피상적인 내부자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덕현 외 역, 2005).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이러한 지리적 소외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인지도에 따라 정책 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또한 요원한 것이다.

3) 모호한 정체성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세 번째 문제점은 정책 자체의 모호한 정체성이다. 정책이 지닌 모호함은 ‘여성친화도시’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정책 시행 목표의 변화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에 따른 결과이다. 다시 말해 정책이 지닌 모호한 정체성의 문제는 앞서 논의한 여성에 대한 단일 범주화의 문제, 지리적·공간적 개념의 편협한 이해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천편일률적인 정책 내용 등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여러 문제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책이 논의하는 ‘여성’ 범주의 모호함, ‘친화’라는 단어의 모호함,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와 지리적 스케일의 모호함이 동시에 작동한다. 조영미 외(2009)는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지닌 문제가 첫째, 도시 공간에 한정되어 시행되는 여성 정책인지, 둘째, 포괄적인 여성 정책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정책의 모호한 정체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책이 포괄적인 여성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 공간 내의 다양한 여성들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의 뿌리는 1970년대 중반 서구 사회의 여성 운동에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정책화’되는 과정에는 국제기구의 공간에 대한 성 주류화 논의가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구 사회가 논의하던 지역 및 도시의 스케일과, 국제 사회가 정주 환경 개선 및 여성 빈곤 퇴치 등을 위해 논의한 여성 친화적 도시의 스케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의 여성 친화적 도시 정책은, 여성의 일상이 반영된 도시 공간으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주 환경의 개선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는 달리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의 건설을 성평등 정책의 실천적 전략으로 활용한다(유희정 외, 2010). 관련하여 김양희 외(2008)는 여성 친화적 도시 정책이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이라는 주류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공간의 성 주류화임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에 여성 친화적 도시 개념이 도입되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곧 여성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중 가장 발전한 단계인 성 주류화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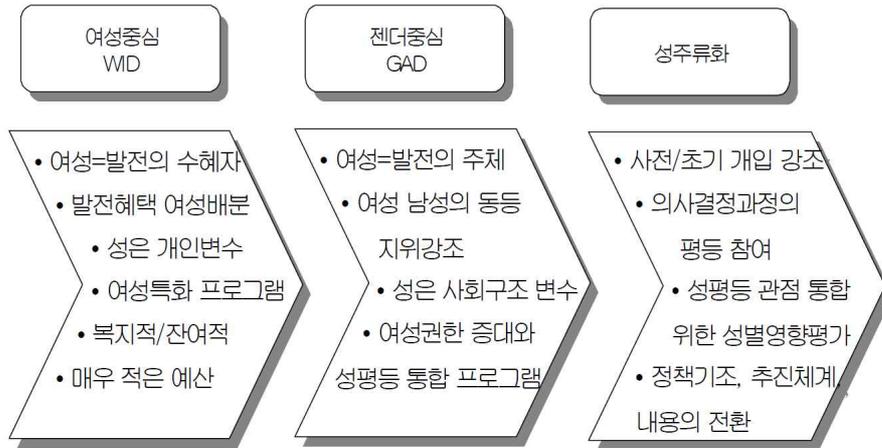


그림 8. 여성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출처: 김양희 외, 2008, p.23.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성 주류화 단계보다는 여성중심의 WID(Women in Development)와 젠더 중심의 GAD(Gender and Development)에 걸쳐져 있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김경희, 2005). 또한 실제로 여성 정책 영역에서는 WID적 접근이 선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GAD적 접근과 ‘성 주류화’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사회 내에서는 매우 전환적이며,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제기구의 정책 접근법을 한국에 도입할 당시 지구적 스케일 안에서의 한국 여성의 위치성(locationality)과 한국 사회 내의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김경희, 2005). 이에 더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모호한 정체성을 더욱 흐릿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¹⁸⁾

18) 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여성친화적 요소와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존 연구의 분류는 본 연구의 2장 3절을 참조하라.

IV.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전략

1. 공간의 덫(Spatial Entrapment):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해석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타 정책과 차별화되는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일상 생활과 삶에 밀접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간’은 미시적 관점의 일상을 정책에 녹여내기 위한 매우 유용한 개념적 틀이자 장치로써 작동한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공간을 그저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여 젠더 편향적 이분법이 공간으로 재현되는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맹점을 지닌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심화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관통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 ‘공간의 덫’에 걸린 여성들

본 논문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의 세 갈래로 논의하였다. 첫째, 정책이 논하는 여성의 범주가 단일화되어 있다. 둘째, 정책의 내용과 관련 연구가 논하는 공간의 개념이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다. 셋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의 결핍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을 연결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은 ‘공간의 덫(spatial entrapment)’이다. 공간적 속박, 공간적 간헐으로도 해석되는 공간의 덫 이론은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거리 직장을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노동 시장과 선택의 폭은 좁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장 취업의 기회 또한 낮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Hanson and Pratt, 1991; 1994). 여성들의 수평적 움직임의 제약은 수직적 움직임의 제한, 곧 기회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신혜경, 1994). 즉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처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차별적 양상을 뜻하는 것이다(정현주 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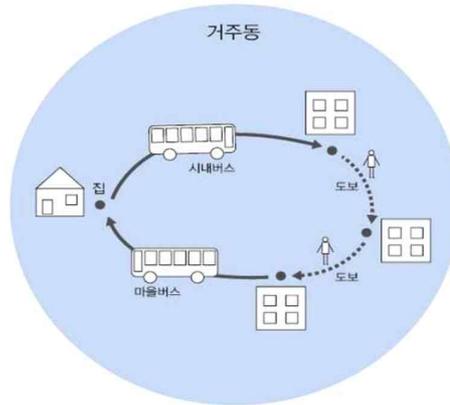


그림 9.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과 주요 생활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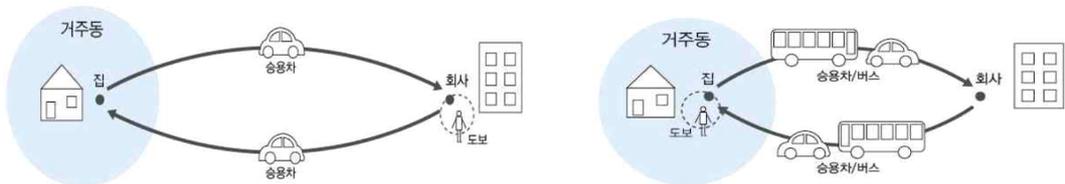


그림 10. 취업 남성(좌)과 여성(우)의 이동 패턴과 주요 생활권역
출처: 최유진 외, 2013, p.175-176.

일상생활의 성별 차이는 특히 이동성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최유진 외, 2013). 먼저 [그림 10]에 표현된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이 주로 근린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보행 이동과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동의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의 이동 패턴을 표현한 [그림 11]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남성과 여성의 주 보행 이동 범위가 각각 회사 근처(남성)와 집 근처(여성)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들의 활동 반경은 주로 직장 근처에, 육아와 가사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의 활동 반경은 주로 가정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주요 도보 생활권 차이

는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주요 책임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의 주된 이동 수단 또한 다소 차별적이다(최유진 외, 2013). 먼저 여성 취업자는 근린생활권 범위 내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린생활권을 벗어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남성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 취업자에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에는 자가용 활용 이동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최유진 외, 2013). 이러한 차이는 대중교통 이용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차를 끌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자녀와 함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즉,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는 남성보다 훨씬 높지만 돌봄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고 있는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질은 낮은 것이다. 따라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일상생활의 반경이 좁아져 결국 공간의 텃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텃 현상을 더 넓게 적용하자면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 다시 말해 직주기능 분리로 형성된 젠더화된 도시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적공간을 여성의 공간, 공적 공간은 남성의 공간으로 연결 짓는 이분법적 공간은 여성들을 사적 공간에 가두어 ‘재생산’이라는 여성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전통적 여성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간의 이분법적 관념은 물리적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끝없는 공간의 텃을 만들어낸다. 즉 공간의 텃이란 결국 여성이 마주하는 공간적 차별의 양상이 다시금 사회의 성차별적 양상으로 연계되어 고착화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타고 일어난 북미·유럽 여성들의 밤길 되찾기(Take Back The Night; TBTN) 운동은 남성의 일상 경험을 도시 공간의 구조와 설계의 표준으로 삼아 여성들의 공적 공간 이용에 제약을 만드는 공간적 차별에 대해 반기를 든 운동이었다. 여성들의 공간 되찾기 운동은 공간과 성차별이 서로 연계되어 작동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제2물결이 서구의 전형적인 ‘백인-중산층-여성’의 삶만

을 담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TBTN 운동 또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운동이었다는 지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즉 특정 집단의 여성만을 억압받는 주체로 상정하여 해당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 제2물결과 TBTN 운동은 젠더, 인종, 성적체성, 성적 지향, 계급, 종교, 출신국가 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적으로 작동하는 차별의 양상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허점을 지닌다. 이에 더하여 TBTN 운동으로부터 이어진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또한 이미 존재하는 젠더 규범 및 유급/무급 노동과 연관된 젠더 편향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닌다(Kern, 2019).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내용 중 특히 공간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여성의 정체성이 자녀 양육과 돌봄 등 모성과 동일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CCTV 및 가로등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사업들이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안전을 위협받는 수동적인 여성성에 갇히게 한다(최유진 외, 2013).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돌봄, 일·가정 양립, 안전’의 키워드로 수렴하고 있으며 특정 여성 집단에 한정되어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적-공적 공간으로 젠더화된 도시 공간의 이분법을 타파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오히려 ‘공간의 뒷’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함정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물리적 공간의 변화 또는 여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하 여성공간)’ 조성 사업이다. 2022년 1월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다섯 개 지역의 대표 사업에도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광주 북구)’, ‘여성희망창작소(광주 동구)’ 등 여성 공간의 설립 또는 운영 사업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 공간들이 다시금 일·가정 양립, 돌봄의 키워드로 묶인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핑크 택시, 임산부 배려석과 같은 사업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여성혐오(misogyny)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한국경제, 2021).

여성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남성의 신체구조와 남성의 활동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공간 구조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이다(고윤경, 2016). 따라서 여성 공간에 대한 논의와 공간 설치의 사회 구조 내에서 억압받고 비가시화되는 여성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 공간 내의 여학생 휴게실은 단순히 여학생이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오마이뉴스, 2020), 대학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위협으로부터 위축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활동과 네트워크를 구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필요한 것이다. 핑크 주차장, 여성전용 택시 등과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공간과 정책이 단지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 또는 여성에 대한 배려의 맥락으로 소개되거나 이해되기 때문이다(고윤경, 2016).

같은 맥락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조성된 여성들을 위한 공간 또한 여성 공간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채, 그저 ‘여성’ 또는 ‘돌봄’이라는 단어만 추가되어 여성 친화적인 공간이라는 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여기는 이성애 핵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공간의 텃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상상하기란 더욱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여성 공간’은 특정 집단의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여러 집단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공간은 그저 여성을 따로 모아두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여성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중심의 공간이자 가능성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 :

문제 해결을 위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제안

단일 범주화된 여성,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단편적 정책이라는 비판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전신 모델인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부터 시행 후 10년 이상이 지난 여성친화도시 정책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젠더화된 공간을 해체하기 위한 정책이 모순적으로 다시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공간의 덧’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의 덧’을 해소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 절에서는 1절에서 논의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전략적 개념을 제시한다.

1) 공간에 대한 경험 재구성하기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고유한 영역 중 하나는 젠더화된 노동 분업이 산업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맞물려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을 드러내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김현미, 2008).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이분화된 공간적 불균등이 젠더와 성차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로써 증명하였다(Massey, 1994). 그러나 이 시기의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여성의 교외화, 핑크 컬러 계도 형성, 공간의 덧과 같은 현상은 주로 ‘서구 사회의 중산층-이성애-유(有)자녀-여성’ 중심의 한정적인 논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백인 중산층 가정 개념에 기초하여 ‘여성의 장소인 집’을 강조하는 것은 흑인 여성들이 갖는 ‘일터’와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억압의 다양한 맥락을 삭제해버린다(정현주 역, 2011). 또한 당시의 연구들은 사적 공간-여성의 공간, 공적 공간-남성의 공간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관념을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 맞서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한 것은 페미니즘의 제3물결과 함께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이라는 개념이다. 역설적 공간이란 공간을 배타적인 위치 관계, 즉 안/밖, 위/아래, 공적/사적, 북반부/남반구와 같은 2차원적 평면 공간이 아닌 기하학의 공간처럼 동시에 여러 곳을 점유할 수 있고 상호 중첩되며 안-밖이 연결되는 공간을 의

미한다. 역설적 공간의 개념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젠더’라는 하나의 구조가 아닌 인종, 계급, 종교, 국적 등 무수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정현주 역, 2011).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이러한 역설적 공간의 개념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접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역설적 공간적 개념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접목하는 것은 곧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존재를 가시화하여 공간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이 단순히 공간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활동 또는 물리적 공간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여성들이 지닌 공간에 대한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은 이미 공간의 성차별적 억압에 대한 전유와 전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뿌리인 TBTN 운동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공적 공간에 대한 여성들의 공간권을 요구하였던 운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정책화는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공적 정치’로 끌어올린 ‘공론화’의 일환이기 때문이다(정현주, 2014). 다시 말해 여성들의 공적 공간에서의 성폭력 경험, 사적 공간에 갇히는 공간적 이분법을 역으로 뒤집어 공간의 주체로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곧 역설적 공간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안숙영, 2012).

젠더화된 공간의 억압을 역이용하여 경험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간성을 생산한 사례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공간 운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지난 2016년 5월에 발생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강남역 인근 여성 살해 사건¹⁹⁾은 공간의 역설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남성 가해자에 의해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 사건은 당시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위치한 강남역 10번 출구에 수백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여졌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다. 공중 화장실 ‘공간’에서 일어난 여성 살해

19)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노래방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던 가해자는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칼로 4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와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성평등 아카이브 e전시, “강남역 인근 여성 살해 사건”).

사건은 여성들에게 “나도 그 공간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두려움의 감정을 촉발시켰지만, 동시에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공간이 추모 공간으로 전유됨으로써 사회 변화와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었다. 즉 두려움의 공적 공간이 사회 변화를 위한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외에도 TBTN 운동을 모티브로 활용한 한국 여성들의 밤길 밟기 행사와 공공 공간인 도심 광장과 공원을 주로 활용하는 퀴어문화축제 또한 사회의 비가시화된 존재들이 공공 공간을 전유하여 공간적 억압을 역으로 드러냄으로써, 역설적 공간의 특성을 발현하게 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이슈제주, 2006; 김희성, 2018).



그림 11. (좌)제2회 제주 밤길 밟기 행사 (우)제2회 제주 퀴어문화축제

출처: (좌)제주의소리, 2006. (우)제주일보, 2018.

이렇듯 역설적 공간의 개념은 주로 공공장소 또는 공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적 공간이 ‘공공(public)’을 구성하는 다양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공의 이해’에 도전하여 공간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또한 ‘역설적 공간’의 개념을 활용하여 여성들이 마주하는 일상적 억압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여성들이 주체로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적 공간-사적 공간의 이분법을 탈주하고 가로지르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의 구성과 기획이 필요하다(박경환, 2009).

2) 공간적 개념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드러내기

앞서 논의하였듯 공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변수는 젠더 이외에도 인종, 계급, 종교, 국적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적 권력과 억압의 변수들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교차적으로 작동한다(정현주, 2014). 따라서 여성들 내부에서도 차이는 다양하며 각자의 위치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억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본질주의적 여성성을 주장하였던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비판하며 시작된 페미니즘의 제3물결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여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으로 요약된다. 페미니스트 법학자 Kimberlé Crenshaw(1991)는 교차성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서로 다른 차별이 동시에 얽혀 교차하며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페미니즘 운동에도 교차성 개념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적 변화가 일어났다. 공간 개념은 이러한 교차하는 권력의 작동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공간적 개념 중에서도 특히 ‘장소’는 일상의 공간의 미시적 차별과 억압의 교차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다(정현주, 2014).

한편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Valentine(2007)은 장소의 맥락에 따라 교차하며 작동하는 억압의 양상을 사례 연구로써 규명하였다(정현주, 2016). 그는 한 레즈비언 장애인 여성이 지닌 여러 사회적 변수, 즉 젠더,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각각의 차별이 가정, (장애인)학교, 직장 등 장소에 따라 교차하며 작동한 사례를 분석하며, 다양한 억압의 결합과 배열이 공간적으로 구성됨을 주장하였다(Valentine, 2007). 그러나 교차성 이론은 아직 초기 단계의 이론으로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여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를 지닌다(Hankivsky *et al.*, 2011; 정현주, 2016). 이론적 연구의 결핍으로 인해 아직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접목하는 것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차성 개념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초보적 단계로, 공간과 관련한 개념을 여성 내부의 차이를 정책 내용에 담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령,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조성된 ‘여성 복합 문화 공간’의 이용자를 다양하게 상상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귀농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공간’과, 서울 도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이 생각하

는 ‘여성 공간’은 분명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각 여성들 또한 본인의 위치성으로 말미암아 공간에서 만난 다양한 여성들과 교류하며 사회의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인지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함께 상상할 수 있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의 정책 교육에도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교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의 스케일 차이에 따라 거주 인구 규모, 경제 구조, 지역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해당 지역의 여성들이 마주하는 차별의 양상 또한 다양하다. 학교, 의회, 공원, 집과 같은 공간에 따라 교차하며 달라지는 경험과 장소감(sense of place)을 비교하며 공간과 정체성, 즉 공간과 사회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Valentine, 2007). 이때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인식 개선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유연한 장소성(Flexible Placeness)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적 전략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본 절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마지막 논의의 절로, ‘공간의 텃’과 ‘역설적 공간’ 개념에 더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념과 정책이 지닌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1)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 과정의 정책

2009년 3월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처음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현재 총 95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수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존재 위기에 놓여 있으며(서울신문, 2022), 여성친화도시에 투여되는 예산 또한 매우 적은 실정이다²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권의 의지와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의 특성 상,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내용을 재정비하고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고 하겠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여성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연계를 추구하며 여성을 필두로 한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특히 2단계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지역성’으로 특징지으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시민이 직접 주도하여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유희정 외, 2010). 이러한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간의 차별적 기제를 인지하

20)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중 성인지 정책 분석 평가운영에 포함되며 이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3천 1백만 원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총 예산 1조 4,650억 원 중 가족·청소년 부문에 1조 1,77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권익 파트에 1,352억,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포함된 여성·성평등 부문은 1,055억 원이 편성되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년 예산소개”).

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역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시민과 지역 공간의 관계 맺기의 과정이자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placeness)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장소성 형성에 따른 지역의 변화는 곧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용하는 성평등 공간으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유희정 외, 2010).

한편 장소의 관계적이고 투과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논의한 Massey(2015)는 장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특히 본질주의적 관점이 지닌 장소에 대한 오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은 Tuan(2012)과 Relph(2005)로 대표되는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동질적인 공간에 인간의 경험이 더해지고, 또 인간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집’은 가장 이상적인 진정한(authentic) 장소이다(김덕현 외 역, 2005; 심승희 역, 2012). 그러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집과 장소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며 집을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고향, 즉 모성화된 여성으로 타자화한다(정현주 역, 2011). 즉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그들의 남성성을 위한 본질주의적 장소를 상상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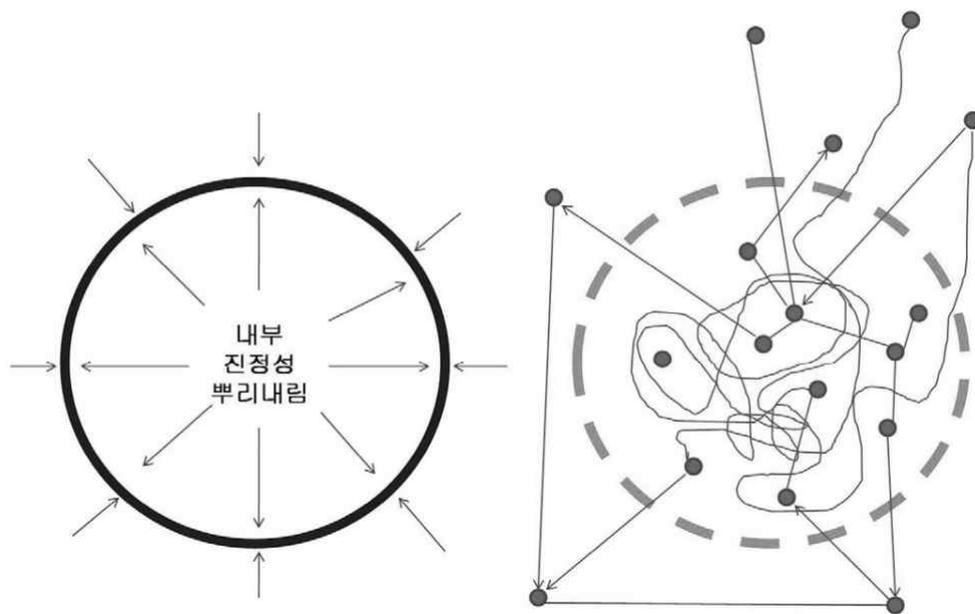


그림 12. (좌)본질주의적 관점의 장소 (우)구성주의적 관점의 장소

출처: 박배균, 2010, p.507.

반면 Massey(2015)는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이 논의한 단일한 정체성과 뚜렷한 경계를 지닌 장소가 아닌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현재진행형의 장소 개념을 주장하였다(정현주 역, 2015). Massey가 논의한 장소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점(node)이자 결절지이다. 둘째,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뚫려 있는 투과적인 것이다. 셋째, 복수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내부적 다양성을 지녔다. 다시 말해 장소는 개방적이고 잠정적인 ‘과정’의 정체성을 지닌다. 이러한 Massey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각 지역은 네트워크 속의 교점(node)에 해당하며, 여성친화도시의 장소성은 이러한 교점을 더욱 촘촘히 구성해나감으로써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구축되는 장소의 특성(정현주 역, 2015)은, 각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의 상호 네트워킹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2) 여성과 장소, 장소와 장소 간의 관계 맺기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사업을 지리적 스케일의 고려 없이 각 지역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공간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고유하고 동일한 장소성으로 적용되어 마치 “경계 지어진 닫힌 공간”(정현주 역, 2015, 44)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의 단계 구분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역별 특성의 발현이나 지역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유연한 장소성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정책의 정체성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 간의 교류, 지역 내부의 여성들 간의 네트워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소성은 장소가 특정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구체화된다(정현주 역, 2015).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젠더’, 특히 여성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시행이 보여주듯,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젠더 거버넌스를 이룩하는 것이 정책이 마주하는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각

여성이 지닌 장소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장소와 관계를 맺는 것은 해당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소속감을 토대로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장소성의 구체화를 이룬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단일한 범주의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여성들을 특정 여성성에 가두는 것은, 여성들이 해당 지역과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에 방해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과 장소의 관계 맺기로 이어지는 소속감 형성, 그리고 지역의 지리적 스케일과 특성을 고려한 관계 맺기는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무장애도시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도시(지역) 공간을 논의하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억압의 양상이 재현되는 차별적 공간에 대한 정책은, 해당 구성원과 장소의 관계 맺기로 장소 소속감을 형성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의 지정 또는 협약 체결로 완성되고 완결되는 정책이 아닌 끊임없는 논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정책’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과정의 정책’의 선두에 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간 정책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정책이 지닌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에 비추어 타자가 만들어지는 작동 방식을 해체하고 그 안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차별적 양상을 드러낼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정현주,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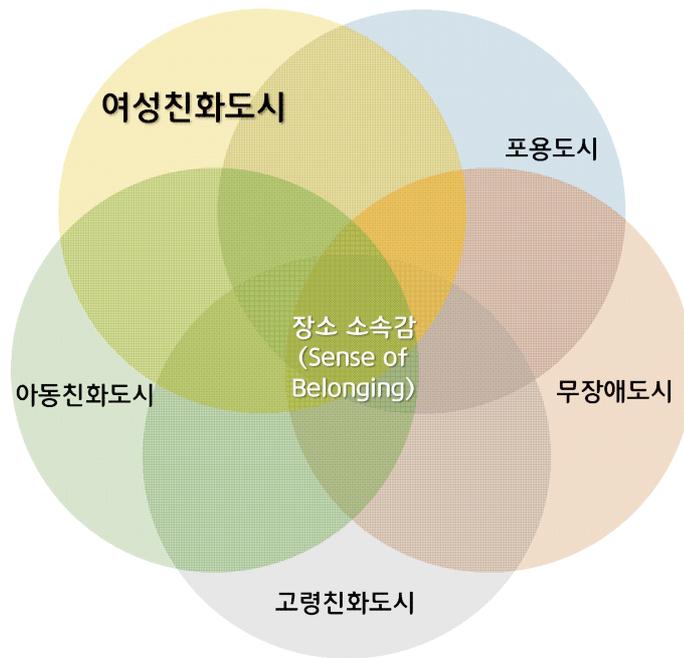


그림 13. 장소 소속감으로 연결되는 공간 정책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며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공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또한 유연한 장소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으로 완성되는 정책이 아닌 지역 내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 맺기로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의 정책이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보다 적실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세 가지의 연구 내용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계보와 주요 개념을 탐색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접목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정책 시행의 배경을 파악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주요 정책 내용에 내재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여러 문제점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다양한 개념적 도구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지닌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갈래로 도출되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그리는 여성의 범주가 ‘자녀가 있는 중산층 여성, 보호받고 배려 받아야 할 존재’로 단일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주로 ‘돌봄, 가족, 일·가정 양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돌봄이 영역이 ‘여성의 영역으로서의’ 공적 영역으로 함께 확대되어 전통적 여성성을 더욱 고착화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여성을 피해자성(victimhood)에 갇히게 하며 젠더화된 공간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범주가 ‘모성’과 ‘약자’로 축약되는 것은 ‘어머니·약자로서의 여성’이 이성애 중심 가부장제적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의 조성 and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는 것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가리는 맹점을 지닌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과 도시적 스케일의 정책 내용, 그리고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리적 스케일이 불일치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스케일의 미스매치로 인한 지리적 소외(geographical isolation) 현상은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관련한 해외의 선행 연구 및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 시행 사례를 지리적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는 지리적 소외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의 뿌리인 서구 사회의 여성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내 여성들의 위치성과 여성들 간의 차이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및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은 모호한 정체성을 더욱 흐릿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관점으로 다음의 이론적 대안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관통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은 ‘공간의 덧(spatial entrapment)’이다. 공간의 덧이란 여성이 마주하는 공간적 차별의 양상이 다시금 사회의 차별적 양상으로 연계되어 고착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내용이 주로 ‘돌봄, 일·가정 양립, 피해자’로 수렴하며 여성들을 다시 공간적 차별에 갇히게 하는 아이러니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으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역설적 공간이란 공간을 안/밖, 위/아래, 공적/사적과 같은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 아닌 기하학의 공간처럼 동시에 여러 곳을 점유할 수 있는 상호 중첩적이며 안-밖이 연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소 복잡한 ‘역설적 공간’ 개념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접목한다는 것은 곧 여성들이 지닌 억압적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여성들의 공간 되찾기 운동, 여성들의 공간적 제약에 대한

‘공론화’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역설적 공간의 개념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간 운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인근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강남역 10번 출구가 추모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모아냈던 것, 퀴어문화축제 등으로 비가시화된 존재들이 공적 공간을 점유하는 경험을 갖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대안은 ‘유연한 장소성(flexible placeness)’ 개념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으로 공간의 차별적 기제를 인지하고 성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해가는 일련의 과정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투과적인 현재 진행형의 ‘장소’ 개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장소 개념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접목해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각 지역은 장소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위한 교점(node)에 해당한다. 이때 네트워크는 시민과 공간 또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각 지역의 상호작용과 지역 여성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는 과정으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끊임없이 구성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장소성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은 해당 장소(지역)의 여성들의 장소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장소 소속감 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억압의 양상이 재현되는 차별적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들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며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공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때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지정으로 완성되는 정책이 아닌 지역 내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 맺기로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의 정책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젠더화되고 성화된 공간 구조에 질문을 던지고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정책 내용이 본래의 의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적 관점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재해석함으로써 정책 실현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단단히 다지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책적 논의에 접목함으로써 지리학적 이론을 현실 정치로 실현하기 위한 자그마한 디딤돌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이론적 대안은 모두 서구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접목하는 부분이 다소 매끄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와 연결되어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적 예시를 제안하는 부분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와 비슷한 면모를 지닌 일본과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교류 연구 또는 비교 연구로 각각의 이론을 세밀하게 다듬어, 동양 사회의 상황에 적실히 들어맞는 내용을 적용해나가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을 필두로 한 시민 대상의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각 거주 지역 또는 방문 지역에 대한 장소 소속감을 면밀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 그리고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경아 역, 2022, 페미니즘, 신사책방(Cameron. D., 2019, *Feminism: A Brief Introduction to the Ideas, Debates, and Politics of the Move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42-90.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강현수, 2014, “도시에 대한 권리”,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91-98.
-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판, 고용노동부.
- 고윤경, 2016, “여성전용공간”, *여/성이론*, 35, 167-180.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03, 참여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255-287.
-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 김미덕 역, 2017, 공간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현실문화(Puwar, N., 2004, *Space Invaders: Race, Gender and Bodies Out of Place*, Bloomsbury USA Academic).
- 김소림, 2016, 인천의 여성친화도시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김경희·류연규·장윤선·권선필·문태훈·이춘아·최경숙·이영세·문경희, 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영택·김원홍·정현주·장정순, 2008,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익산시청.

- 김영화, 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3(1), 91-121.
- 김준호,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1(2), 35-65.
- 김현미, 2008,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이론, 19, 276-293.
- 김혜란·류전희·박성신·이원아, 2006, 여성친화 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한국여성건설인협회.
- 김혜정, 2018,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8(1), 215-249.
- 김희성·김진, 2017, “네트워크 거버넌스 역량과 여성친화도시 구축 성과”, 현대사회와 행정, 27(2), 141-174.
- 대통령 비서실, 2004, 참여정부 1년, 성과와 과제, 대통령비서실.
- 도민영, 2011, 68운동의 경제적 영향: 프랑스 5월 혁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도승연, 2009,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가지는 반여성적 장치와 효과들: 푸코의 공간화된 사유를 중심으로 바라본 분당의 경우에 대하여”, 사회와 철학, 18, 251-290.
- 류형철·이미원·박은희·김성애, 2007, 대구광역시 혁신도시(팔공이노벨리)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 문재원, 2017, “혐오와 친화 사이에서, 도시와 마주친 여성들”, 동북아문화연구, 50, 205-223.
- 박경환, 2009, “교차성의 지리와 접합의 정치: 페미니즘과 지리학의 경계 넘기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21(3), 1-16.
- 박미영,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CPTED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박은순, 2020,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결정 요인과 지정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 백효진·임효순, 2020, “춘천시 도시환경 여건 인식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정책수요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59(2), 71-99.
- 봉귀숙, 201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현황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성지혜, 2016, “여성친화도시의 돌봄 실천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 대구 · 경북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9(1), 75-99.
- 손명철 역, 1993, “사회적 性의 지리학”, 여성학논집, 10, 279-302(Bowlby, S., Lewis, J., McDowell, L. & Foord, J., 1989, “The geography of gender”, Peet, R., & Thrift, N.(ed.), *New Models in Geography II*, Routledge).
- 송향숙·박태원, 2013,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한 여성친화도시계획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361-383.
- 송향숙, 2012,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혜경, 1996, “공간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22-260.
- 심승희 역, 2012, 짧은 지리학개론 시리즈: 장소,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Wiley).
- 심승희, 2013,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현대문화 지리의 이해, 푸른길.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여성학연구, 21(2), 7-37.
- 안숙영, 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 89-112.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

-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유희정·김양희·이미원·최진·문희영,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이미원, 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정책총괄과.
- 이상문·김경희·전영옥·류재수·최이호·이성훈·김영수·김백수·박상철, 2006,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이은희, 1984, “女性問題 研究에 있어서의 地理學的 接近”, 여성학논집, 1, 92-110.
- 이재경 역, 2018, 좋아 보이는 것들의 배신: 여성과 아동, 소수자를 외면하는 일상의 디자인을 고발하다, 반니(Anthony, K. H., 2017, *Defined by Design: The Surprising Power of Hidden Gender, Age, and Body Bias in Everyday Products and Places*, Prometheus Books).
- 이혜웅·강경희·윤금미, 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이현재, 2012a, “도시에 대한 차이의 권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강현수·황진태·김수현 역,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 이현재, 2012b, “코라(chora)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여성주의적 도시권의 가능성: 김슨-그래함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1), 7-34.
- 이현재, 2016, “도시적 감정으로서의 여성 혐오와 도시적 젠더정의의 토대로서의 공감의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철학, 25, 35-64.
- 임현정, 2016,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식과 정책우선순위: 대전지역을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9(4), 153-171.
- 장부년, 2018, 여성친화도시 정책네트워크 사례연구: 인천광역시 부평부와 동구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장임숙·이원일, 201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지방정부연구, 16(4), 33-54.
- 전혜림·양승우, 201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분석”,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6(6), 85-100.
- 전혜림, 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적절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Rose, G.,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John Wiley & Sons).
- 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John Wiley & Sons).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1), 105-144.
- 정현주, 2013,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젠더”,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 정현주, 2014, “공간적 사유와 젠더: 한국 공간환경 연구에서 페미니스트 접근 위치우기”,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287-293.
-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83-300.
- 정현주, 2020, “도시와 젠더”, 한국도시지리학회 편저, 도시지리학개론, 범문사.
- 정희성·조규혜, 2020, “지리학계에 보내는 편지: 지리학과를 떠난 두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 공간과 사회, 30(2), 13-79.
- 정희성, 2018, 역설적 공간으로써 퀴어문화축제 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공미혜, 2014,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 안전도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여성건강증진, 편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25, 19-47.
- 조선주·이선민·이동선·권도연, 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영미, 2009,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 51-60.
- 조영미·장필화·백경재, 2009,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착을 위한 이론화 연구, 서울

시 여성가족재단.

- 조주은·김예성, 2016,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주혜진, 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 페미니즘 연구, 16(2), 133-175.
- 채은주, 2014,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채은주·변병설, 2013, “여성친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7(4), 505-517.
- 최유진, 2016,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최유진·김양희·오미란·이미원·장미현·이동선·문희영, 2015,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최유진·문희영·김양희·오미란·이미원·장미현, 2019, 2019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화평가과.
- 최유진·문희영·장미현, 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동효, 2019,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이 안전증진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1), 277-302.
- 한연동, 2018,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 한연동·김천권, 2017,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미국 44개 도시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20.
- 허순평, 2020,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기반한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선영, 2015, “여성친화도시 관점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5(1), 93-122.
- 황진태, 2010,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4, 33-59.

<국외 문헌>

- Bowlby, S., Lewis, J., McDowell, L., & Foord, J., 1989, "The geography of gender", Peet, R., & Thrift, N.(ed.), *New Models in Geography II*, Routledge.
- Burnett, P., 1973, "Social change, the status of women and models of city form and development", *Antipode*, 5, 57-61.
- Cope, M., 2002, "Feminist Epistemology in Geography", Moss, P.(ed.), *Feminist Geography in Practice: Research and Methods*, Wiley-Blackwell.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ngland, K., 1991, "Gender relation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ity", *Geoforum*, 22(2), 135 - 147.
- England, K., 1993, "Suburban Pink Collar Ghettos: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2), 225-242.
- Eurocultures, Fopa Dortmund, Groupe Cadre de Vie, Praxis & Seirov-Nirov, 1994, *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 Moving towards a Gender-Conscious City*, European Commission.
-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2004, *A City Tailored to Women: The Role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Femmes et ville Program.
- Fenster, T., 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4(3), 217-231.
- Fraz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56-80.
- Hankivsky, O., & Cormier, R., 2011, "Intersectionality and Public Policy: Some

- Lessons from Existing Model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4(1), 217-229.
- Hanson, S., & Pratt, G., 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229-253.
- Hanson, S., & Pratt, G., 1994, “On suburban pink collar ghettos: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3), 500-502.
- Hanson, S., & Pratt, G., 1995, *Gender, Work and Space*, Routledge.
- Hayden, D., 1980,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3), S170-S187.
- Heldman, C., Ackerman, A. R., & Breckenridge-Jackson, I., 2018, *The New Campus Anti-rape Movement: Internet Activism and Social Justice*, Lexington Books.
- Jackowska, O. B., & Novas, M., 2022, “Who owns public spaces? The trailblazer exhibition on women’s everyday life in the City of Vienna (1991)”, *Planning Perspectives*, 1-27.
- Kern, L., 2019, *Feminist City: Claiming Space in a Man-Mad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PLC.
- Kimberlé Crenshaw,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Dowell, L.,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 59 - 72.
- Monk, J., & Hanson, S., 1982, “On not excluding half of the huma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4(1), 11-23.
- Oberhauser, A. M., Fluri, J. L., Whitson, R., & Mollett, S., 2017, “Engaging

- Feminist Spaces: Introduction and Overview”, Oberhauser, A. M., Fluri, J. L., Whitson, R., & Mollett, S., *Feminist Spaces: Gender and Geography in a Global Context*, Routledge.
- Palm, R., & Pred, A., 1974, *A time-geographic perspective on problems of inequality for women*, University of California.
- Pickup, R., 1984, “Women’s Gender-Role and its Influence on Travel Behaviour”, *Women and the Environment*, 10(1), 61-68.
- Pratt, G., & Yeoh, B., 2003, “Transnational (Counter) Topographies”, *Gender, Place, And Culture*, 10(2), 159-166.
- Rose, G.,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ipahi, E. B., & Örselli, E., 2012, “An essay on the concept of ”Women Friendly City based on the Turkish cas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view*, 1(3), 239-245.
- Swarr, A. L., & Nagar, R., 2010, *Critical Transnational Feminist Praxis*, SUNY Series, Praxis: Theory in Action.
-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AGENDA 21*,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Valentine, G., 1989,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21(4), 385-390.
- Valentine, G., 2007, “Theorizing and researching intersectionality: A challenge for feminist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9(1), 10-21.
- Weisman, L. K., 1994, *Discrimination by Design: A Feminist Critique of the Man-Made Environment*,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Whitson, L., 2017, “Gendering the Right to the City”, Oberhauser, A. M., Fluri, J. L., Whitson, R., & Mollett, S., *Feminist Spaces: Gender and Geography in a Global Context*, Routledge.
- Women and Geography Study Group of the IBG, 1984, *Geography and*

Gender: An Introduction to Feminist Geography, Hutchinson.

Young, I. M., 1989.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99(2), 250 - 274.

Zelinsky, W., Monk, J., & Hanson, S., 1982, "Women and Geography: A Review and Prospectus", *Progress in Geography*, 6(3), 317 - 36.

<뉴스 기사>

The Guardian, 2019, "City with a female face: how modern Vienna was shaped by women", 5월 14일자,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9/may/14/city-with-a-female-face-how-modern-vienna-was-shaped-by-women>.

TIME, 2009, "Will High-Heel-Friendly Streets Keep Seoul's Women Happy?", 8월 5일자, <http://content.time.com/time/world/article/0,8599,1914471,00.html>.

TIME, 2011, "Take Back the Night", 8월 12자,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88114_2087975_2087967,00.html.

경북도민일보, 2006, "혁신도시 명칭 '팔공이노밸리'로 선정", 12월 8일자,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94>.

굿모닝충청, 2021, "대전 동구,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신청하세요", 5월 24일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272>.

뉴제주일보, 2022, "여성 세대주에 '안심 세트' 지원...호신벨-실내용 홈캠 등", 5월 8일자,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83087>.

서울신문, 2022, "尹, 여가부 폐지 강조하자...전국 95개 여성친화도시 위상'흔들'", 3월 1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6012002>.

연합뉴스, 2019, "서울대 청소 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 ... 학교가 책임", 8월 14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4060800004>.

오마이뉴스, 2019, "총여 폐지시키더니, 이젠 '여학생 휴게실'까지 없앤다?", 6월 29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7409.

이슈제주, 2006,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자", 7월 6일자, <https://www.iss>

uejeju.com/news/article.html?no=2436.

인권오름, 2010, “청소 노동자, 공간 그리고 섹슈얼리티: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공간적 접근”, 10월 20일자, <http://hr-oreum.net/article.php?id=1585>.

전북도민일보, 2021, “익산시,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 12년 ‘명성·위상퇴색’”, 4월 4일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013>.

제주의소리, 2006, “여성들이여, 당당히 밤길을 걷자!”, 7월 7일자,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5>.

제주일보, 2018, “제주 퀴어문화축제 개최”, 9월 29일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308>.

중앙일보, 2021, “‘이러니 아이 안 낳는다’ 생후 59일 안고 국회 출석한 용혜인”, 7월 5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8221#home>.

한겨레, 2007, “도시가 여성에게 편안해진다”, 7월 3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225816.html>.

한국경제, 2021, “임산부석에 붙은 ‘페미니즘 아웃!’...“비켜주면 될 거 아냐””, 9월 17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723737>.

한국일보, 2018, “신보라 ‘국회의원 사상 첫 출산휴가 도전해요’”, 9월 11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53774225>.

<여성가족부 배포 보도 자료>

여성가족부, 2012, “여성친화도시 9개소 신규 지정하여 전국 39개 지역으로 확산되다”, 11월 21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3, “‘전남 여수시’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12월 6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 체결” 1월 29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6, “‘여성친화도시’전국 66개로 늘어난다”, 1월 22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7,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프로젝트’추진”, 1월 20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8, “86개 여성친화도시, 생활체감형 성평등 정책 추진에 속도 낸다”

다.”, 1월 23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19,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마을 단위 성평등 정책’ 추진한다”,
1월 30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20,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하는 지자체, 전국 92개로 확대”, 1월 17
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21,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 1월 28일자 배포.

여성가족부, 2022,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정”, 1월 24일자 배포.

<웹사이트>

성평등아카이브, <http://genderarchive.or.kr>

Take Back the Night Foundation, <https://takebackthenight.org>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익산시 홈페이지, <https://www.iksan.go.kr>

【부 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22년 1월 기준)

지역	지정 도시(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3	47	5	
서울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	14
부산	-	북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	6
대구	달성군	수성구	-	2
인천	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	5
광주	-	광산구	동구, 북구	3
대전	중구	동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	5
울산	-	-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1
경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	11
강원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	-	8
충북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	6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아산시	11
전북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	3
전남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8
경북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	6
경남	남해군, 고성군,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6
제주	-	-	-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Women Friendly City'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Feminist Geographic Perspective-

Min-kyeong Lee

This study expands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n Korea through concepts of Feminist Geography. This study reviews and analyses literature of feminist geography and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t analyses the problems that the policy has based on feminist geographical concept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problems.

Problems found with the policy were summarized by three essential aspects: (1) Parts of the policy are fortifying patriarchal femininity by misconstruing femininity with maternalism. (2) The policies focus on changes in the physical space were caused by a lack of ge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space. (3) The policy lacked theoretical foundation making it ambiguous. The study suggests the problems can be alleviated by integrating the feminist geographical concepts of 'spatial entrapment' and 'paradoxical space' into the policy. Spatial entrapment is a phenomenon where the spatial discriminations that women face throughout their lives gets combined with the social discriminations of women and therefore solidifies both discriminations.

'Paradoxical space' is a space where the top, bottom, inside and outside of the space are overlapped, intersec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like a geometric space. Integrating this complicated concept into the policy means reconstructing the spatial experiences that women have and changing them to the experiences of producing new places. The study suggests broadening the

theoretical base of the policy by using the feminist geographic concept of 'flexible placeness'. This will build strong networks between women and the spaces they share as well as the governing provinc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Women Friendly City' can be redefined as "A region where women are able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space by conducting gender equality spatial policies".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s a processual policy that is continually assessed and reconstructed by citizens, spaces and never-ending debate. It should stand at the frontier of 'processual policy' and become a model for other spatial policies for social minorities. It is a possibility it already has.

Keywords Feminist Geography, Feminism, Women Friendly City, Women Friendly City Policy, Spatial Entrapment, Paradoxical Space, Flexible Space, Sense of belonging to Places.